

Left21.com

2009년 8월 1일 ~ 8월 14일 | 제11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친서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범죄를 가릴 수 없다

8월 15일 서울에서 모이자

미디어법은 이명박이 집권 초반부터 추진하려던 악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와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이명박은 이 한 켠점에서조차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저항 때문에 미디어법 문제는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디어법의 수혜자가 될 보수 언론들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각 계각층의 반정부 시국선언이 빗발치고, 검찰총장으로 내세웠던 천성관이 부패 문제로 낙마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계속 후퇴를 할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던 이명박은 결국 미디어법 상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초라한 지지율 속에 허우적거리던 이명박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은 결국 정당성·합법성이 결여된 부정투표와 날치기뿐이었다. 미디어법의 처지는 정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악마에게도 입기를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적 법에 의해 꾸역꾸역 정치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명박의 처지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의 사태는 날치기가 이명박이 승기를 잡은 계기이기는 커녕 자충수일 뿐임을 보여 주고 있다. 국회가 마비돼 할 일이 없어 밖으로 등떠밀린 한나라당의 ‘시장 어묵 쇼’ 2탄은 냉랭한 반응만 사고 있다.

미디어법에 대한 대중적 반대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촛불모임과 대학생, 법조인들도 미디어법 무효 선언과 항의 행

동을 잇달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애초에 표명했던 대로 의원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국회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천명하고 거리로 나와 저항을 촉구했다면 여진은 더 강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발의 양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불을 피운 것은 단지 미디어법만이 아니다. 이윤을 고스란히 챙겨서 ‘먹고 뵈’ 상하이차 대신 위기의 속죄양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점거 투쟁은 경제 위기에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다른 노동자들의 가슴에 동병상련의 불길을 붙이고 있다. 서민을 위해 쓸 돈은 없다더니 4대강 정비에는 22조 원이나 쏟아붓는 이명박의 행태도 불길을 붙이고 있다.

이명박도 이런 성난 민심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허겁지겁 성난 민심을 잠재워 보려는 ‘친서민’ 시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쌍용차 파업에 물을 끊고 테이저건을 쏘아대다가 최근 갑자기 협상을 재개했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친서민’ 교육 정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후불제 도입은 그것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없앤 조삼모사고, 입학사정관제는 컨설팅 10회에 3백 50만 원 받는 고액학원을 낳고 있다.

이명박의 본심은 ‘친서민’ 시늉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도



김민진 기자

한 대학노조 활동가를 국정원으로 잡아갔고, 시위 저지 차벽전용차를 개발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악법에 대해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 꼭 이뤄야 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부자 프렌들리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명박에게는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출구 전략”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노와 반감이 계속 쌓일 날만 남았다. 우리의 “출구 전략”은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전국민적 선거 참여”(7월 25일 미디어법 통과 항의 집회 때 국회의원들이 외친 구호)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우리의 분노를 그때까지 유예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 소심하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의원 몇 명 더 만드는 방식으로는 이 분노를 해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을 지금까지 비틀거리게 만들어 온 아래로부터 저항이다. 따라서 8월 15일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집회에 참가하자. 이처럼 탄압과 경제 위기가 주는 불안감 속에서도 저항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운동을 조직할 지도력 있는 운동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특히, 아직은 경제 위기 충격에 움츠려 있는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발휘돼야 한다.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때 노동자들은 전국적 파업을 통해 기업주들과 정권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바로 이런 힘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70일을 넘긴 쌍용차 점거 파업

쌍용차 ‘살인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7월 30일 저녁 현재 쌍용차에서는 ‘끝장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 자리는 ‘노조가 점거 파업을 풀지 않는 한 교섭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던 사측이 27일 저녁에 먼저 노조 측에 만나자고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물론 청와대였다. 노동유연성이 “국정 최대 과제”라는 이명박은 쌍용차 정리해고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가 저들을 결국 교섭 자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사실 70일 넘게 지속된 점거 파업 기간에 정부와 사측은 거듭 노동자들의 투지에 밀려 애초의 무자비한 비타협적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현재 사측이 제시하고 있다는 교섭안도 애초 쌍용

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과 비교하면 후퇴한 안이다.

물론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70일간 싸워 온 노동자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끝장 교섭’은 쉽게 타결되기 힘들 듯하다.

아직 최종적인 타결을 봐야 하지만, 70일 넘게 진행된 쌍용차 파업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 줬다. 무엇보다 쌍용차의 투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고통전가

쌍용차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올해 초

법정관리가 상태가 됐다. 위기의 주범은 2004년에 쌍용차를 매각한 정부와 쌍용차 인수 후 기술유출만 한 ‘먹튀 자본’ 상하이차였다. 그러나 저들은 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속에 쌍용차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나아가 저들은 2천6백여 명 대량해고와 1인당 생산대수를 3배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좋은 회사로 가는 과정”(사측 유인물)이라고 했다.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해 쌍용차를 투기자본과 재벌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 매각하려는 거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투쟁 경험이 적은 쌍용차 노조를 ‘노동유연화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노조기 교수의 지적처럼 “쌍용차를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겨 현대차 등 강성노조를 길들이겠다는 게 진짜 목표”였던 것이다.

처음에 저들은 매우 단호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4월 말 인터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되면 노조가 두 분파(남은 자와 떠날 사람)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이간질해 노조를 약화시키고 파괴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다. 실제로 저들은 제일 먼저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또 저들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파산·청산밖에 없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했다. 하지만 연관업체

와 금융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관련업체까지 20만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파산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청산보다 회생 가치가 3천억 원이나 더 많다고 회계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저들이 손해볼 일을 할 리는 없었다.

협박과 이간질을 하는 한편, 저들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미리 28억 원을 주고 용역강제 제공 업체와 계약을 해 두었다. 그리고 곧바로 ‘여차피 당신은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돼 있으니 빨리 회망되길 하라’는 대대적인 협박과 강요를 시작했다. 있지도 않은 명단에 속아 불안에 떨며 ‘회망되길’을 신청한 사람이 1천여 명에 이르면서 이런 시도는 성공하는 듯했다.

▶ 4면으로 이어짐

종합

세상을 읽는 지평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 ‘수고했다. 시원하다. 계속 좀 밝아 달라’ 는 말을 한다. 오죽 가슴에 맺혔던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싶다.”

박희태, 뉴라이트만 만나고 다니나?

“‘날치기’ 통과밖에 없었다면 과거 선배들의 ‘본’을 받아 좀더 매끄럽게 해치웠어야 ... 앞으로의 폭풍을 어떻게 이겨내나.”

극우익 김동길의 한탄

“설령 MBC 민영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도 <동아일보>는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다시피 한 ‘노영방송’ MBC를 인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동아일보>

“저희가 웃고 싶어서 웃습니까? ... 경호원, 특수경찰 1백여 명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당했고, 사진 찍을 땐 ... ‘하트 해 봅시다. 자 사랑해요~한 번 해 봐요’ 얼른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명박과 역지로 웃으며 사진 찍은 과산고 학생

“[이명박과 하트 모양으로 사진 찍은]아이들이 ‘우리가 중죄를 저지른 것인가’란 생각을 하면서 가치관에 심각한 혼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

괴산고 교장 김기택

“무해하기보다는 유해하지 않다.”

쌍용차 살도 최루액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소견

“도전성이 강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나의 교육 목표”

‘올백’ 맞은 초등학교생들에게 현금을 상으로 준 인천 K초등학교장

막시즘2009



조영아 기자

1천여 명이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토론하다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 포럼 막시즘2009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고려대에서 열렸다. 막시즘2009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열린 막시즘2009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2백16개 시민·사회 단체가 막시즘2009를 후원했다. 특히 두 달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해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자본의 공세를 뚫을 수 있는 쌍용차 투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하고 연대 메시지를 보내 의미를 더했다.

이런 지지와 후원 덕분에 1천63명이 등록해 성황리에 행사가 열릴 수 있었다. 등록자 중 대학생들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 참가자도 4백여 명에 달했고 청소년도 36명이 참가해 활기 넘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해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막시즘2009 개막식 ‘위기의 시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투쟁’은 이정아 쌍용차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조연희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등 최전선에서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투사들의 연설로 힘차게 시작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노조 총파업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맞선 투쟁을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정아

위원장의 절절한 연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쏟게 했다.

50여 개 강연에선 나흘 내내 활기와 열정이 넘쳤다. 특히 경제 위기를 다룬 강연들은 모두 성황을 이뤘다.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 정성진 교수의 강연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의 저자 크리스 하먼의 강연은 분강인데도 참가자 수가 2백 명에 가까웠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규향, 하종강, 우석균 등 저명한 연사들의 강연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평일에 진보를 고민하고자 이른 아침에 나온 1~2백 명은 적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들을 만나기 위해 연사들이 무보수로 연단에 섰을 것이다. 이런 연사들이, 강연들이, 참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참가자들과 연사들의 열정에 감탄했다.

특히 올리는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패널 토론이 흥미를 끌었다. ‘진보진영, 복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기의 자본주의 — 학생좌파의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청중 토론도 활발했다. 민주주의, 여성, 환경, 이주,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다.

열기는 각종 문화 행사에도 이어졌다. 막시즘2009 간이 서점에서는 총 1천4백10권의 책이 팔렸다.

오수연 작가가 함께한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밤’, 각종 영화 상영, 텐안먼 항쟁 20주년 기념 전시와 아프가니스탄

슬라이드 사진전도 관심 속에 진행됐다.

막시즘2009는 연대의 장이기도 했다. 쌍용차가족대책위 활동 후원 모금에 50만 원 가까운 돈이 모였고, 용산 철거민살인진압법대위 부스에도 3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막시즘2009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과 언론악법 날치기 항의 운동 한복판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25일 저녁 강연을 취소하고 언론악법 통과와 쌍용차 파업 노동자 지지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언론악법 철폐 촛불집회에는 막시즘 참가자들이 ‘저항의 버스’를 타고 함께 참가했다.

폐막식 ‘하먼이나 변혁이나, 위기의 시대 좌파의 과제’에는 크리스 하먼과 마지막 촛불 수배자 김광일 씨의 어머니 안명례 씨가 연단에 섰다. 안명례 씨는 아들의 안부를 기원하면서 아들의 대의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크리스 하먼의 폐막 연설은 이번 호 6~7면에 실려 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에 막시즘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이견 짱이다. 말하자면 그건 내 머릿속 밀실에만 있는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지금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노동과 자본을 말하니 설렌다. 설레는 일이다, 이견!” 하고 떨리는 참가 소감을 남겼다.

막시즘2009는 끝났지만 오늘날 위기의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지윤 기자 | dejune@left21.com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거품 보너스를 또 지급하려는 은행들

과연 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더욱 깊은 데 있지만, 거대 은행들이 미친 듯 돈놀이를 하며 부풀린 신용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촉발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은행들이 갑자기 다시 돈을 쓸어담는 듯하다. 지난주 토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미국 은행들 낙관론을 펴다”였다.

낙관론은 지난주 미국의 주요 은행인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체이스, 시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가 모두 올해 2분기에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제이피모건과 함께 경제 위기의 승자로 떠오른 골드만삭스도 거품 성장기에 지급하던 만큼의 보너스를 다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에 직원 상여금으로 총 1백14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인데, 평균 지급액은 77만 달러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더 황당한 사실도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터진 금융 공황에 직격탄을 맞았던 거대 보험회사 AIG가 보너스 지급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AIG는 금융상품개발부 임직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한다. 신용파생상품을 마구잡이로 거래하다가 파산해 제일 먼저 정부에 손을 벌렸던 그 AIG가 말이다!

동시에 은행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기 시작했다. 최근 시티(영국 금융 중심지)는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그들이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 차입 증가가 지난해 가을 시작된 국가의 은행 구출 작전 때문이었는 데도 말이다.

은행들은 또한 지난주에 데이비드 워커 경(卿)이 제안한 것과 같은 매우 사소하고 미약한 규제 강화 조처 거부한다. 워커는 완고한 과격파도 아닌데 — 그는 전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이었다 —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의 제안에 대한 시티그룹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다. “워커의 논평에 항의하는 은행가들”

“한 투자은행의 최고경영자는 금융기관들이 이사회 평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공개해야 한다는 데이비드 경의 제안을 반박하며 데이비드 경이 포퓰리즘적 요구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 CEO는 ‘이런 조처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하고 물으며 ‘은행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조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칭얼대는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움을 사는지조차 모른다. <볼링 스톤> 최신호는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은행들을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묘사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겪었던 은행들은 이제 뻔뻔함을 되찾아 전처럼 탐욕을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외관상 회생은 낙관적 환상에 불과한데, 은행이 회생한 배경에는 금융권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둘 다 극도로 취약해서 자기를 사업에서 상당 부분을 매각해 간신히 흑자를 올렸을 뿐이다. 동시에, 두 은행은 미국 정부에게 총 9백억 달러를 수혈 받았다.

골드만삭스조차 예외적인 상황 덕분에 돈을 번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할 때 골드만삭스는 그것을 일괄 인수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더 근본에는 금융권을 떠받치려는 미국과 영국 정부, 유럽 중앙은행의 막대한 노력이 있었다. 덕분에 공식 금리는 제로였고 은행들은 사실상 공짜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는 엄청난 이자를 물린다.

이렇게 해서 은행들은 다시 거드름을 피울 수 있게 됐지만, 은행들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정부 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해 우리를 쥐어짜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여부다.

번역 차승일

가난의 대물림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

이명박 정부가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주요 대학들에서 신입생을 전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입학사정관 몇 명이 학생 수만 명의 창의력이나 가능성을 시험 성적이나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더라도 내신·수능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 등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본고사와 다름없는 현행 논술 시

험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수학·과학·영어 면접 시험이 눈술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일종의 논술 시험이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의 자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면, 입시 비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주요 대학들은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를 은밀히 실시하는 길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고려대가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한 것이 드러났고, 이명박 정부는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일제고사 실시 등으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일류 중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교육비도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왜 합격하고 떨어졌는지 지금보다 더 모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입시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노린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미 몇몇 논술학원들은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학원은 학생의 전반적인 경력을 관리해 줘야하므로 당연히 비쌀 것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 학생이 입학사정관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지층을 회복하고자 ‘친서민’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시도는 입시지옥의 고통과 사교육비 증가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학벌 사회 유지와 경쟁 강화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뿌

리 깊이 박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온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가 20조 9천억 원으로 2007년보다 4.3퍼센트 증가했다. 올해도 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을 평준화하고 어지간한 성적을 낸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권리를 줘야만, 학생들은 좀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사교육비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사교육 악패 해결책이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이정구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학계에 미친 악영향 하나는 경제 현상을 심리학의 한 범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케인스가 말한 바대로, 미인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최고 미인으로 뽑힐 수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여름 최고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권하는 책 중 한 권인 <야성적 충동>도 “심리적 요인” 이아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1930년대에 일어난 대공황은 비관과 낙담 그리고 회복기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 제기되는 경기회복론이 객관적 실증이나 통계 수치들보다는 믿음·기대·희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예측보다는 심리적 바람에 가깝다.

물론 이런 기대나 희망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외양을 갖추기 위한 근거들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주가가 1500선을 넘어섰고, 부동산 지표가 이번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1분기(0.1퍼센트)에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2.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9월의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 특히 금융부문에서 최고치에 이르렀던 불안정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공포지수(Volatility index)와 신용디폴트스왑(CDS)이 크게 하락한 것은 경기가 더 심각하게 침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이런 기대가 너무 과한 나머지 이번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평가받는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말을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차 위기

정말 경기회복의 새싹(green shoots)이 보이는 것일까?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지금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위기의 발화점인 미국의 주택경기는 아직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5월 미국 20대 도시의 케이스-실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자유낙하는 모면했지만(전달 대비 0.5퍼센트 상승)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1퍼센트 하락했다. 루비니 교수는 “취약한 노동시장” 때문에 “주택가격이 앞으로 13~18퍼센트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시장이 회복하기는커녕 2차 부동산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총 6조 7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내총생산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호텔과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금융권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캐롤린 펠로니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은행들이 2차 대규모 손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차입되거나 파산한 상업용 부동산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갑절이 넘는 수치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은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CMBS)

의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 증권의 10퍼센트 정도인 9백억 달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부동산 붕괴 조짐과 더불어 신용카드 위기가 미국 경제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더 높아졌다. 이로 인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규모는 3천억~4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체율 급증의 주요 이유는 실업자가 증가해 가계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현재 9.6퍼센트로, 이는 26년 만에 최고치고 194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실업률이 24.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치솟는 실업률(현재 9.6퍼센트인데, 연말에 11퍼센트까지 상승할 전망)과 높은 저축률 등은 미국의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저축률은 이번 위기 전에는 0퍼센트였다가 지금은 6.9퍼센트로 상승했는데, 향후 11퍼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대다수 가정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간소비 위축은 미국뿐 아니라 특히 신흥공업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거나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부양

미국 경제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불답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2차 경기부양을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 부통령 조지프 바이든 등은 지난 2월에 발표한 1차 경기부양(7천8백70억 달러)의 약효가 다했다며 추가 경기부양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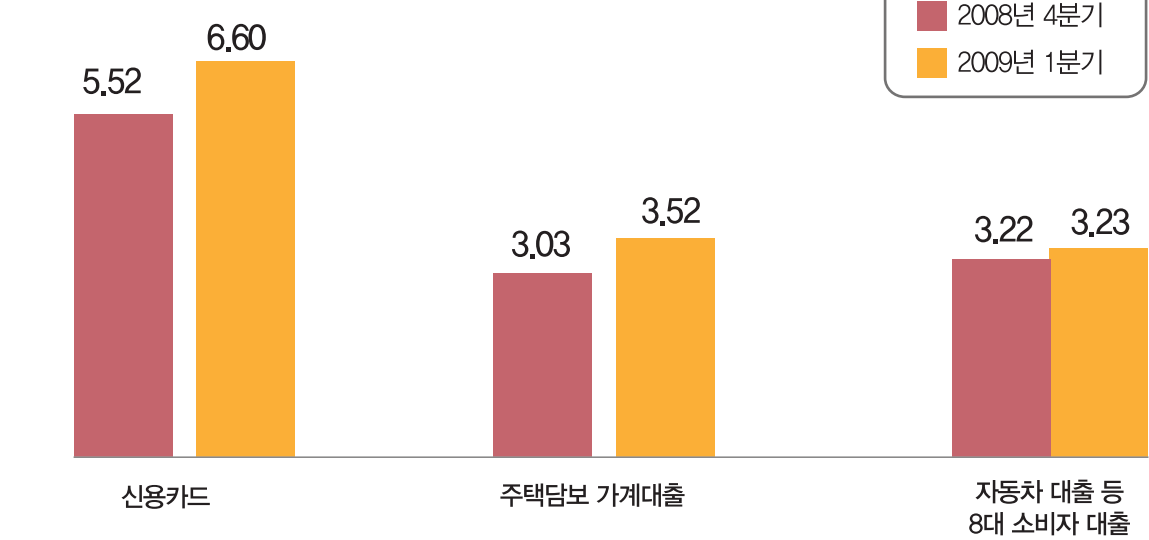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선불리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늘어난 재정적자만 해도 1조 1천억 달러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더해 경기부양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경기를 회복시키지는 않고 인플레이션 유발한다면 실질금리만 인상시켜 경기회복을 더 요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사정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케인스의 가르침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5월의 설비가동률은 기록을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인 68.5퍼센트까지 하락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이것이 가계소득을 축소시키고 대출 연체를 높여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다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생산을 줄이게 만드는 악순환 고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경기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럽과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다. 산업생산과 실업률이 미국 못지 않게 심각한 EU 국가들 중에서 특히 영국이 심각하다. 영국의 소비자 레버리지(소비자들이 소득의 얼마만큼을 부채로 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1백70퍼센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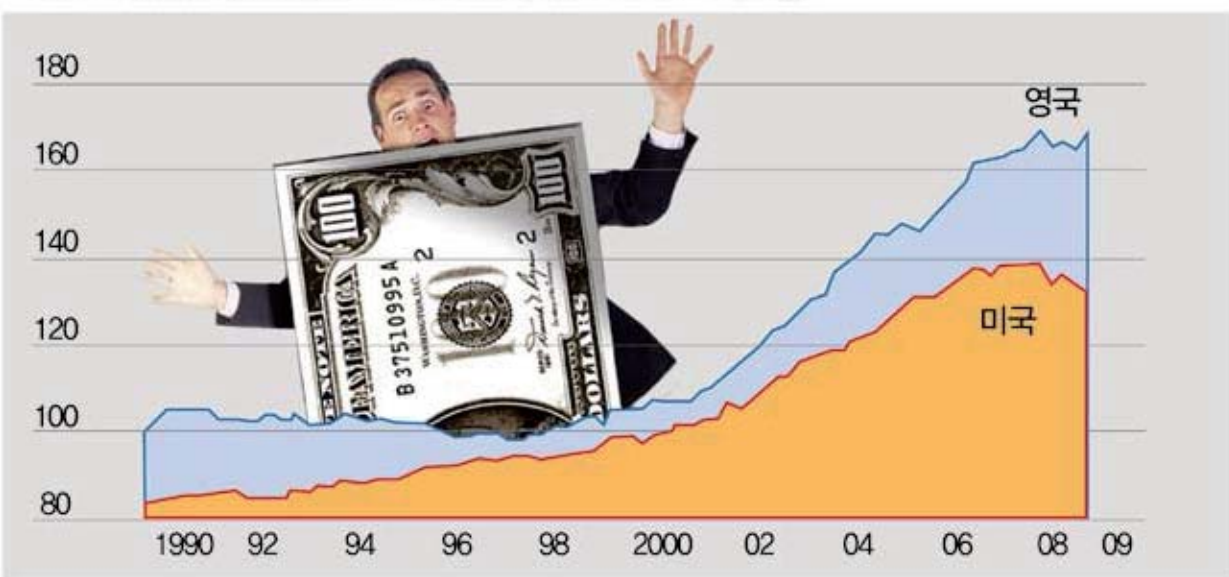
일본 경제도 지난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의 내

[표1] 미국 가계대출 연체율 (단위 : %)



*자료 = 미국 은행가협회(ABA)

[표2] 가계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모면했지만 이로 인해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전망은 기대에 불과하다.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설사 회복된다 할지라도 매우 불품없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 확대로 인한 대중국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하반기 일본의 경제성장은 -5퍼센트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런대로 양호한 경제 성적을 내는 쪽은 중국이다. 그 때문에 중국이 세계경제를 회복시켜 줄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과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고성장을 거듭했던 중국도 이번 위기에서 벗어날 동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출 증가율이 20~30퍼센트에 이르던 것이 이제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그 부족을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메우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감소를 민간소비로 메우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4조 위안(2007년 국내총생산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경기부양과 3조 위안이 넘는 은행 신용 확대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늘어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거품

한국과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경기회복 주장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셴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라면서 “이런 정책은 장기적 해법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며,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산거품이 새롭게 형성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빠른 회복 신호는 그 자체가 거품”이라는 말이다.

한국 경제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은 모면했을지라도, 또 소비 심리는 회복됐다 할지라도 실물경제는 여전히 암울하다.

올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 20퍼센트 넘게 하락했다. 전경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백대 기업의 투자 축소 원인으로 수출과 내수 등 수요 부진(34.2퍼센트),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16.5퍼센트), 수익성 악화(15.8퍼센트) 등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1997년 경제 위기 수준인 60퍼센트대에 머물러 있다(올 1분기는 65.9퍼센트).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2006년 24퍼센트에서 올 상반기에는 33퍼센트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같은 기간에 8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갑절 넘게 증가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이고, 3~4년 전에 수주한 선박 수출이나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무역수지 실적은 더 초라해진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모면했지만 이로 인해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전망은 기대에 불과하다.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설사 회복된다 할지라도 매우 불품없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실물경제 지표들은 경제가 올 하반기에 다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적으로 과잉축적된 생산설비의 가치 파괴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는 간헐적인 쇼크를 동반한 패혈증 증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공포지수(Volatility index)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수치로 산출한 지표. 이 수치가 높을 경우 불안심리가 높아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디폴트스왑(CDS)
신용자산 손실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해 주는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

더블딤(double dip)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쌍용차 점거 파업

‘살인 해고’에 맞선 70일 넘는 영웅적 파업

▶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이 5월 22일부터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단호하게 점거 파업에 돌입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저들의 고통전가 시도는 점거 파업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혔다. 1930년대 미국 GM 파업이나 1998년 현대차 파업에서도 입증됐듯이 점거 파업은 생산에 타격을 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사기와 단결을 높이고 자신들의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점거 파업

쌍용차 점거 파업의 시작은 당시 화물 연대의 박종태 열사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구실도 했다. <연합뉴스>는 “올해[하루]는 산하조직이 앞장서고 총연맹이 뒤따르는 방식”이라며 “등 떠밀리는 민노총”이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던 이명박에게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나아가 쌍용차노조는 서울 시청광장에 10만 명이 결집한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자신들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 수호를 위한 투쟁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결합을 시도한 이 모범적 시도는 두 투쟁 모두를 고무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투쟁이 정치적 쟁점과 투쟁으로 발전할 필요성을 보여 준 것이다.

쌍용차 파업은 단호한 점거 파업이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연대의 결집점을 제공하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것도 보

여 졌다. 지지 방문과 연대 집회가 이어졌고 6월 중순 한길리서치 여론 조사에서는 63퍼센트가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했고 79퍼센트가 경찰력 투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사측은 ‘살인 해고’를 중단하러 하지 않았다. 노조가 입수한 사측 임원의 수첩에 적혀 있었던 “타협 X. My Way”가 저들의 기조였다. 저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비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다.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강제 출근시켜 구사대 노릇을 강요했다. ‘산 자’에게 쇠파이프를 쥐어주고 ‘죽은 자’의 뒤통수를 치라고 강요했다. 서로 마주 노려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가슴에 피눈물이 흘렀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노동자에게 모든 고통이 전가됐다.

나아가 저들은 6천여 명의 경찰과 용역강패, 경찰 헬기, 온갖 중장비까지 동원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전쟁터·생지옥으로 만들어 갔다. 나중에는 물, 음식물, 의약품을 차단하고 살인적 고사 작전을 추진했다. 살갓이 벗겨지는 최루액을 종일 비처럼 쏟아 붓고,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을 쏘기도 했다. 잠도 못자게 하루 종일 음악과 선무방송을 해댔다. 이미 정리해고와 구사대 동원 등이 낳은 압박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 등으로 6명이 죽은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 배가”를 추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와 그 지배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제대로 물도



노동자 굶겨 죽이기·말려 죽이기 작전에 맞서 의연하게 저항하는 쌍용차 노동자들

사진 이윤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는 이런 생지옥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지와 용기였다. 이런 투지에 밀려 지난 6월 26일 파업 침탈을 시도했던 용역강패와 구사대 3천여 명은 공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우리 2천 명이 민노총 등 30명의 조직적 싸움을 못 당해내더라”며 혀를 찼다.

저들이 엄포와 달리 아직도 도장공장을 진압하지 못한 것도 이런 노동자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업 이탈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폐렴 치료 때문에 나왔던 노동자가 다시 진입을 시도할 정도다. 쌍용차지부는 “노동자들에게 백기투항을 원한다면 8백50개를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

고 말한다.

더구나 지금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은 그야말로 “화약고”다. 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밀폐돼 있고 내부에 30만 리터의 신나와 페인트가 가득해서 진압 과정의 작은 실수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면 인명 몰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재자가 아니라 투쟁의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 8백여 명의 70일이 넘는 이런 단호한 점거 파업에 대한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은 충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연대 집회 등을 조직하고 연대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연대 파업 건설보다는 중재자 구실에 더 치중해 왔다.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도 “공장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현대차 윤해모 지도부는 투쟁을 회피하려고 사퇴해 버렸고, 기아차 지도부는 기아차 파업과 쌍용차 파업을 연결시키는 데 소극적이다.

물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이 이런 지도부를 압박하는 높은 자신감과 투지, 정치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에 다소 위축돼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격정하면서도 부문의 벽을 넘어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쌍용차 연대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지도부들은 제대로 받아안지 않았다.

하지만 쌍용차 투자들의 초인적인 투쟁이 조금씩 연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진

보정당과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도 국제 연대 메시지와 행동이 이어졌다. 여론의 압력에 국가인권위도 긴급 구제 신청을 했고, 2004년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장본인인 민주당 조차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호한 점거 파업과 이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정부는 7월 24일에는 노사정 대화를 주선했고 7월 30일부터 사측이 노사 교섭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들은 ‘일부라도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부도 기업은 공기업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옳다. 이명박이 4대강 살리기에 쓰겠다는 22조 원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대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투쟁과 연대의 힘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노사의 대화를 막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지적했다. 쌍용차에서 사측이 물러서면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

이 자신감을 얻고 고통전가에 맞서 싸울까 봐 두려운 정부와 주요 기업주들이 양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지도부는 끝까지 파업 노동자들을 옹골게 대변해야 하고,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는 협상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연대 투쟁과 파업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현장과 작업장에서 그런 연대 투쟁과 파업을 호소하고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한다.

쌍용차에서 대량해고가 성공하면 다른 부문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자기 일처럼 연대에 나서야 한다. 연대 투쟁의 압박과 손해를 더 버틸 수 없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쌍용차 사측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만 명이 참가해 경찰력을 뚫고 실제로 물과 식량, 의약품을 전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계속 개최해 파업 노동자들의 힘과 사기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준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을 분명한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조삼모사 식 기만 정책

최근 21세기 판 사사오입 사건인 언론법 날치기 처리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진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풍이 일 기미가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 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7월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마치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또다시 서민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이다.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살인적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서민이

고통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이 2006년 6백 70명, 2007년 3천7백26명, 2009년 6월까지 1만 3천8백4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백만 청년실업 시대에 이 상태로 갔다가는 몇 년 내 수만, 수십만 명이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실제로 각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만 규제해도 등록금의 15퍼센

트는 삭감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총액이 10조 원인데 대운하 삼질예산 22조 원의 절반만 써도 무상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등록금 전체 액수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이 해마다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등록금을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안이다.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이자 납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졸업 후 바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보다는 낫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해 오던 장학금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소득분위 7분위에게까지 차등을 뒀 지급해 왔던 학자금 대출 금리 지원도 중단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졸업 이후로 고통이 연기됐을 뿐 가난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총액은 더 늘어났다.

단기간에 대량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문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의 입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언제

벌어서 갚나” 하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며 “학생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정부의 말은 “대학 등록금은 이제 학생들이 평생 부담지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영

종합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2차 북핵 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일괄타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시 정부 때와 대응이 흡사해지는 듯하다. 북한 선박 추적, 양자 회담 요구 거절, “북한이 달라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클린턴 국무장관 발언, 협상에 나서더라도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중순 미국 신안보센터(CNAS)에서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대북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완성되지 않은 오바마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신안보센터는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로 오바마 정부 들어 영향력이 강화된 연구소다.

보고서의 내용은 부시 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마 부시 정부가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 비해, 미국이 처한 곤란한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한 점이 부시 정부 때와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보고서는 군사적 옵션이 최선은 아니라고 규정하는데, 사실 부시 정부 또한 말로는 군사적 옵션을 언급했지만 중동 전쟁에 발목 잡혀 있는 처지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는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났다.

보고서는 미국 지배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자고 말하는 듯하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폐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문제는 미국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바람에, 북한의 핵동결 해제 ‘역행’을



부시보다 다소 ‘밝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오바마도 결국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막지 못했고 북한에 끌려 다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는 부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되, 중단 기적으로는 핵폐기가 불가능하니 차라리 잃어버린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주도권’

이를 위해 보고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고서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통해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봉쇄 등 다자주의적 제재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당장에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심지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까지 낚을 위험이 있더라도, 더 강력한 제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 패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동아시아 민중들의 목숨은 얼마든지 부차화할 수 있다는 냉혹함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보고서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의 재래식무기에 대항할 미사일방어체계(MD) 무기들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남한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독자적 핵개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므로 “안보공약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과 이명박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통해 익히 접했던 것들인데, 이런 계획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의 군비 증

강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갈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서 ‘부시스런’ 행동을 보여왔던 이명박이 오바마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보면, 정말이지 오바마가 부시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셋째, 보고서는 5자회담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항한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의 수많은 안보 불안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미국이 추구할 ‘전략적 관리’가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열강들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전장에서 상처 입은 야수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정책 수단이 없다.”

그럼에도 상처 입은 야수가 더 사나운 법이듯이, 이번 대북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순순히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결코 평화를 바라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동아시아 강대국들을 관리하기 위해 북핵 문제에 개입을 강화할 것이다.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오바마 정부는 부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4대강은 죽이고 녹색 투자도 줄이고

대운하 위장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폐기하라

안 하겠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고쳐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히 남부지방에 홍수 피해가 생기자 ‘4대강 살리기’가 이런 홍수도 예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라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의 홍수 피해는 오히려 ‘4대강 살리기’가 홍수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 피해가 모두 4대강 본류(本流)와 관계없는 지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지천(支川)의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의 물 배출이 안 돼 발생한 전형적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하천제방이 무너진 14개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강바닥을 파내고 댐 수십 개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홍수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대형 댐 개수는 세습

이상으로 늘었지만 홍수 피해액은 계속 늘었다.

낙동강 전체를 10여 개의 대형 호수로 만들 이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오히려 홍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홍수 피해’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7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남한강에 설치 예정인 폭 1백 미터, 높이 7미터가 넘는 3개의 보가 세워지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위도 함께 상승해 인근 지역의 지반이 연약해지고 강둑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하류지역은 하천수위 하락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상류 물 흐름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수질 악화, 서식 생물 변화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4대강 죽이기’가 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들인 수십조 원이면 지역의 상하수



플로리다 운하 건설 완공 후 홍수피해 (1928)

도를 개선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상류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신 나간 토목 정책을 비판했다.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방 조치는 시급하다.

그러나 이명박의 4대강 정비는 필요한 예방 조치에 써야 할 정부 재정을 엉뚱한 데 쏟아부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 뿐이다.

댐 건설로 홍수 피해 못 줄여

무엇보다 갈수록 더 많은 기후 재해를 일으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철도 같은 운송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대신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을 삭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입수한 ‘2010년 철도예산안’을 보면 광역철도 35퍼센트, 도시철도 41퍼센트, 수원~인천 복선전철 75.6퍼센트 등 대부분의 철도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철도 예산 삭감액을 전부 합쳐도 4대강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22조 원)의 20분

의 1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 정비는 오히려 4대강을 따라 수십 개의 연결된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 교통량을 늘릴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또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 시멘트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다. 지난 7월 23일 한화증권은, 올 하반기 4대강 정비 등 공공발주가 늘어나 현대건설이 연간 수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며 주식을 사들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늘어날 도로망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업자들은 토지 가격 인상을 기대하며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고, 내년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 지자체 몫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명박 시대에 사는 우리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해를 악화시키는 진정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지고 있다.

4대강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정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다함께 주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한 폐막 연설을 옮긴 것이다. <레프트 21>은 크리스 하먼의 다른 연설들 —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오늘의 제국주의, 21세기 노동계급** — 도 차례로 연재할 예정이다.



온두라스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

우리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중적 위기라 함은 지금까지 삶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믿어 온 수많은 사람들을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복수의 위기를 말합니다.

먼저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IMF 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997~1998년에 여러분은 이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위기는 과거지사이고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 위기가 발생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에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시장 자본주의 아래 장밋빛 미래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동유럽에서는 대량 실업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절박한 처지로 내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배자들은 '1989년의 민주주의 운동 탄압은 이제 있어라. 자본주의가 당신들을 부유하게 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부 연안의 경제 특구에서 일하던 농민공 2천만 명이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내륙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나라들은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 10억 명 이상이 기아선상에 놓이게 될 처지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언론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은 '걱정마라, 경제 위기는 1, 2년이면 끝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설령 이번 위

기가 1, 2년 안에 끝나더라도 5년이나 7년 안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 정부가 복지혜택과 공공부문 임금 등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번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본주의가 더는 은퇴한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는 놀라운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들이 갑자기 남은 10여 년의 인생을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전쟁을 양산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미국은 이라크를 편들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1991년에는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세르비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끔찍한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옛 소련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서방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군벌들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끔찍한 내

전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내전들은 한국전쟁만큼이나 참혹했습니다. 콩고 내전으로 4백만 ~5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라크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파키스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둘 다 핵무장 국가이고, 5~10년에 한 번씩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심각한, 세 번째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은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내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인류의 생활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대한 지역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일강 삼각주, 방글라데시 같은 곳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후 패턴이 바뀔에 따라 현재의 농경 지역에서 더는 농경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배자들 자신도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10년 동안 기후 변화라는 현실을 애써 부인해 온 미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각국 지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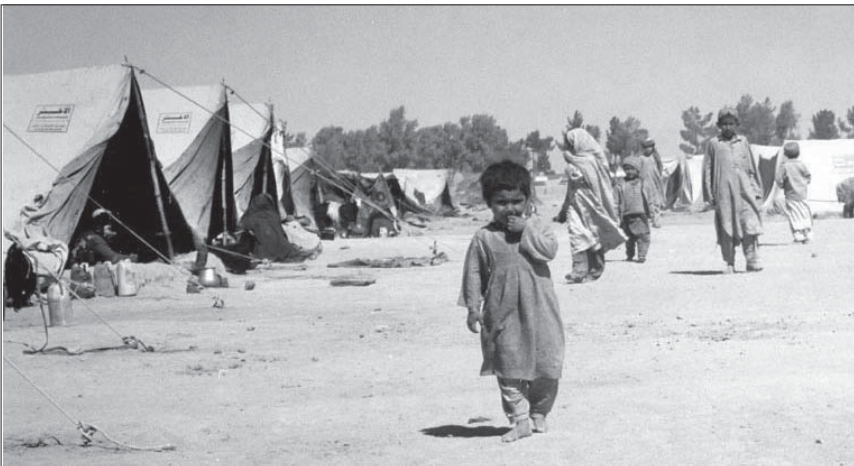
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기가 막히게도 지난 2년 동안은 세계 각국 정부가 말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 왔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각국 자본가들의 친환경 투자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어이없게도 일부 식량을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3분의 1이 대체 연료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디젤 연료의 대체 연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전 국토를 아자수 농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UN) 산하 기관들이 세계 각지에서 기아 사태가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본가들의 눈먼 경쟁이 위기의 원인

이처럼 경제 위기는 기후 변화를 막는데 필요한 자원 투입을 축소시키고, 기후 변화는 식량난을 심화시키며, 식량난은 전쟁 위험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악순환이 21세기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2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모든 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서 자본주의는 숨 막히는 억압을 조장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고 위생도 열악한 슬럼가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일과 양육을 모두 책임지라는 끔찍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태국 같은 나라의 많은 여성들에게는 서구의 부유한 관광객들에게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생계를 해결할 수단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은 막상 부자 나라에 가서도 인종 차별을 부추



전쟁과 빈곤을 낳는 자본주의의 모습 미군 점령하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세계 어느 곳의 작업장이든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체제 변혁의 방법을 논의하고 과거의 체제 변혁 시도에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에 맞선 저항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영국·프랑스·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에 맞선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계급 내의 한 분파에서 시작해 학생들로, 이어서 노동자들로 번진 이란의 민주화 투쟁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은 이 다양한 투쟁들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매우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이 체제에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 함께 투쟁에 나서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들불을 일으키는 듯한 상황 말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를 마비시킨 1995년 11월의 공공부문 파업이 그랬고, 군부독재를 몰러나게 한 1987년 남한의 대중 시위와 파업이 그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할 것 같았던 독재 정권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1989년 동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동유럽 지배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자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갑자기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버마 항쟁, 이란의 민주화 시위, 4년 동안 네 개의 정부를 전복시킨 라틴 아메리카의 저항 등.

그러나 대중적인 분노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제에 맞서 투쟁하려는 사람들 자신이 사기저하되기도 쉽습니다.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자본주의 언론들은 언제나 이 같은 체념을 조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르크스주의자 출신으로서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주류 언론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서 당신의 칼럼을 지면에 실어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철학자나 사회학자로서 세상이 바뀔 수 없는 이유에 관한 두꺼운 책을 쓰길라도 한다면 당신은 대학 사회에서 승진 가도를 달릴 뿐 아니라 당신의 책은 모든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될 것입니다.

반면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식인 사회에서 괴짜 취급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관념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려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항상 모든 것을 같이였으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에 격변을 불러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간 영국에서 벌어진 두 건의 점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눠 볼 행운을 누렸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점거 파업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180도 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마 지난해 한국에서 촛불운동에 참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운동처럼 큰 운동이 결국 승리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사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중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투쟁이 어디서 분출해 나올지

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수억 명의 의식 상태를 흔히 꿰뚫어 보면서 그들이 어느 시점에 분노와 좌절감을 떨쳐내고 투쟁에 나서게 될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투쟁이 분출해 나오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급속으로 된 물건을 부러뜨리려면 먼저 그 물건을 여러 번 구부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대중의 분노도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그러나 이 대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중의 분노가 분출할 때마다 지배자들은 그 분노가 기존 사회 질서의 전복으로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부추깁니다. 극우 언론들은 대중의 분노가 소수 인종 집단을 향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직접 행동에 나서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투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언론도 그러한 태도를 장려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매우 우파적이었던 언론들조차 이런 때에는 운동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그러나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며 너무 나가지 말라’고 훈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투쟁이 분출하기 오래 전부터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의 작업장이든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체제 변혁의 방법을 논의하고 과거의 체제 변혁 시도에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작은 투쟁들에 지도력을 제공하고, 그러한 투쟁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승리를 통해 이들은 훨씬 더 큰 투쟁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분출했을 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것입니다. 거대한 투쟁이 결국 체제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 체제를 전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승리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지금 상태로 계속 굴러가게 놔둬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세계를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폴란드계 독일인으로서 위대한 혁명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 사회주의 아니면 야만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옳았음은 제1차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스탈린주의와 나치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도 비슷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끔찍한 독재자들과 전쟁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취·번역 천경록

독일

좌파당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디링케

독일 총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당 디링케는 독일 정치의 세력 균형을 좌우할 열쇠를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디링케는 2007년 6월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 대안’(WASG)과 민주사회당(PDS)이 통합해 만든 급진 좌파 정당이며, 독일 사회민주당의 리더였던 오스카 라퐁텐이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디링케의 프랑크푸르트 지부 위원장인 폴크하르트 모슬러와 디링케의 국제정치위원회 의장인 프랑크 렌켄이 디링케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말했다. 둘 모두 디링케 내 급진 좌파 네트워크인 ‘마르크스21’의 지지자들이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디링케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모슬러: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지도자들은 10퍼센트 득표를 원했죠. 실제 득표율은 7.5퍼센트였습니다. 어쨌든 파시스트들이 약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나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후보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 디링케 득표율은 하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경제 위기 덕분에 디링케가 선전할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디링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디링케는 경제 불황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디링케 지도부는 국가 개입 요구를 꺼렸는데, 국유화를 옛 동독의 스탈린주의 국가와 동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시장에 기초를 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렌켄: 디링케 지도자 중 상당수는 옛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출신입니다. 그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독일사민당(SPD)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연립 정부는 시 공공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디링케에는 서로 견제하는 좌우 세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당의 대응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수준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주를 뒤에서 행진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링케 지도부의 혼란이 기층 당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모슬러: 최근 전당대회에서 좌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유로로 인상할 것과 독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 등 꽤 괜찮은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지도부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공장폐쇄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렌켄: 국가 주도 투자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 같은 급진적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은 실업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 힘입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슬러: 디링케의 좌파 세력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좌파 세력 중 하나가 ‘반자본주의 좌파’인데,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주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투쟁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세력은 ‘마르크스21’이 속한 ‘사회주의 좌파’입니다. 이들은 노조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내 우익과 싸우는 데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디링케가 경제 위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당내 좌우 분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렌켄: 쟁점 중 하나는 디링케가 미래에 SPD 정부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슬러: 오랫동안 선출 공직에 몸담

아 온 PDS 출신일수록 디링케가 SPD 연정에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디링케 전당대회에서는 큰 분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슬러: 언론들은 좌파들이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곧 회복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당내 주요 네 세력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공통된 입장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대중 합의를 봤습니다.

렌켄: 그러나 해외 군사 개입 문제 등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에 이 문제들이 다시 제기 될 것이 확실합니다.

언론은 디링케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힘들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략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많은 독일인이 경제 위기의 급진적 대안을 찾고 있었고, 그들은 언론의 허튼소리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의 투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디링케는 파업이나 시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모슬러: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몇몇 중요한 파업과 공장폐쇄에 맞선 저항이 있었습니다. 디링케의 동지들은 연대 활동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링케 내에서 ‘마르크스21’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모슬러: 우리는 일부 논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행 국유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논쟁에서 승리했고 헤센 주(州) 대의원 대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마르크스21’은 무슬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고 이슬람 공포증에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입장이 승리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새로운 모스크 건설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렌켄: 비록 일부 쟁점에서 우리 입장이 소수의 지지만 얻고 있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실망한 사람들을 꽤 많이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행동 등 어떤 쟁점에서는 우리가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마르크스21’은 때로는 소수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합의가 존재하는 쟁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번역 김용욱 기자

자본주의와 예술

이기웅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 교수는 역사적·사회적 고찰을 통해 자본주의와 예술의 상관성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르주아의 지배에 반항하는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독립적 실천이 예술의 자율성을 가능케 해 줬다고 지적한다. 이기웅 교수는 일반 언어학과 러시아 어학을 전공했고, 다할께가 주최한 말시즘2009에서 ‘자본주의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1.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날 문학과 예술의 자유는 — 그리고 순수 학문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 자명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만일 이것을 억압하는 국가나 사회, 집단 등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반작·후진적인 경우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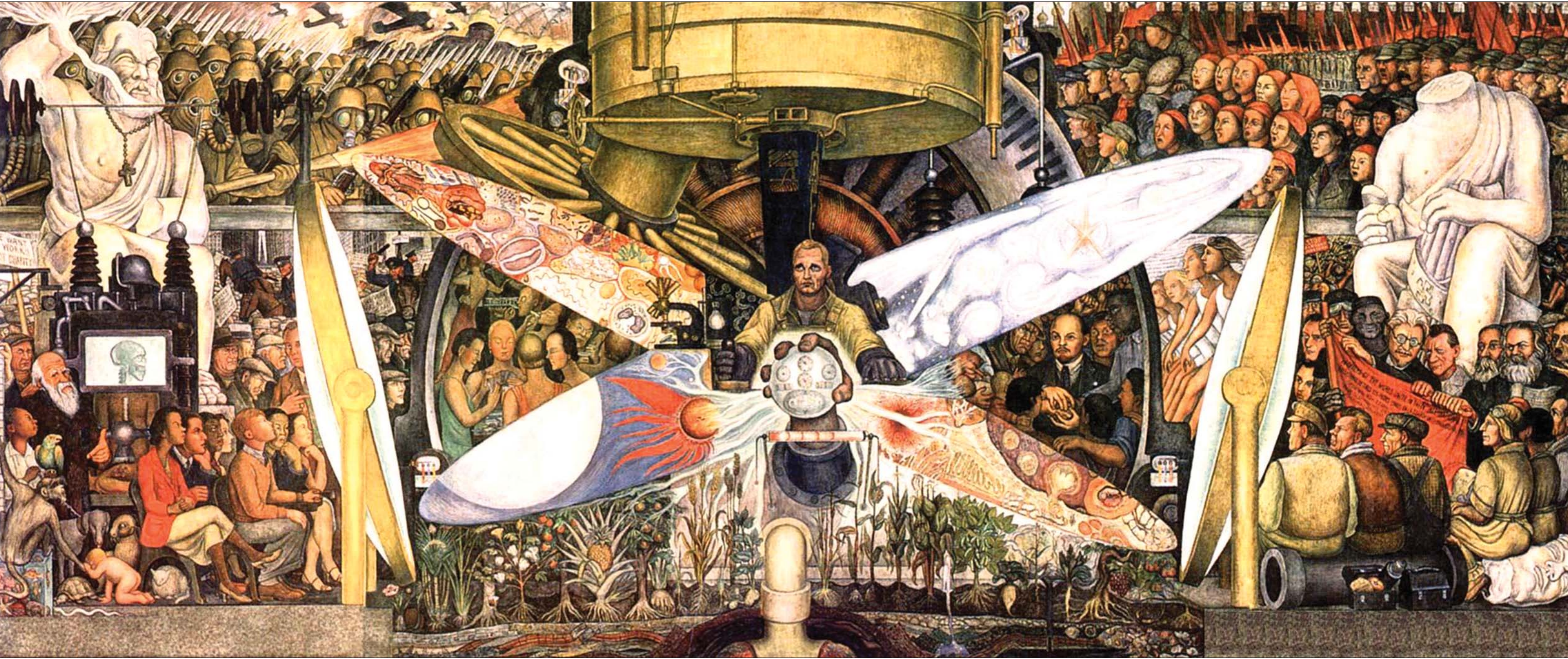
그러나 이처럼 거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예술의 자유는 인간의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서, 그것의 이념적·실천적 기원은 잘 알다시피 서구의 근대 속에 있다. 가령, 서구적 근대의 역사적 보편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철학자로 간주되는 헤겔의 경우, 예술과 종교 그리고 철학은 우리 인간 “정신(Geist)”의 현실적인 역사적 자기완성 — 즉, 인륜성(Sittlichkeit)이라는 궁극적 개념 아래 법의 모든 과정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보편 국가의 형성 —의 자원을 넘어서는 “절대 정신”의 영역에 두고 있다(*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17).

요컨대, 예술과 종교 그리고 철학은 무엇이 참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그 자체로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에 대한 사변 철학의 이 같은 합리적인 담론들이 나왔다고 해서 예술과 예술가들의 자유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egel 철학의 좌파적 해석의 영향 아래 있던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을까.

“가끔은 글을 쓰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며 살아서는 안 된다 … 작가는 결코 자신의 작품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것들은 작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코 수단이 아니기에 바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작품들의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출판의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작업이 아니라는 데 있다.”(다음의 “선언”에서 제인용, André Breton & Diego Rivera(L. Trotsky), “Pour un art révolutionnaire indépendant”, Mexico, 1938; L. Trotsky, *Littérature et révolution*, Paris: 10/18, 1974(제주소))

창작의 자유와 경제적 독립

젊은 시절 마르크스의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념적으로 당연한 가치였던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어내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시게ชัด 하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 말을 스스로 실현해 가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표적인 어느 한 개인의 신념과 실천만으로 사회 속에 예술의 자유가 현실로



멕시코 벽화 운동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삼자로의 남자>, 1934, 프레스코, 멕시코 시티, 예술 공전

2. 문학 “장”의 자율성 — 그 역사적 기원과 구조

중심의 이론과 구조주의 둘 다 지역·국복하며 종합화하려는 부르디외의 방법론에 따르면, 주어진 사회적 대상 — 혹은 행위자 —에 대한 이해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의 분석과 해명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이 속하는 “장”의 역사적 기원과 장의 구조 속에서 대상이 차지하는 위치. 둘째, 여기에 대상이 갖는 객관적 가능성과 불가성”, 대상을 특징지워주는 “하비투스”(habitus)”, 그리고 이상의 것들을 매개로 해서 대상이 그려내는 궤적(즉, 지향점의 선택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실천적 전략들). 셋째, 이것이 사회적 “장들” 전체의 총체와 과정 속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여기에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자신의 객관화 작업, 즉 자기 반성적 작업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를 두고 부르디외의 “1848년” 전후(前後) 연대라고 할 수 있는 플로베르의 <감정 교육 *Education sentimentale* 1869>에서 문학 장의 발생기를 그려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적 사례를 본다. 소설 속에 인물들의 배치와 행위가 예술과 정치 대립과 시업을 대립으로 하는 권력 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이러한 작품읽기에 착안해서, 인 해명 작업이 바로 부르디외의 <예술의 규칙>인데, 그러면 적어도 프랑스에서 주로 문학의 경우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경제 호황으로 대부르주아들의 특세, 개 외의 방법론에 따르면, 주어진 사회적 대상 — 혹은 행위자 —에 대한 이해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의 분석과 해명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이 속하는 “장”의 역사적 기원과 장의 구조 속에서 대상이 차지하는 위치. 둘째, 여기에 대상이 갖는 객관적 가능성과 불가성”, 대상을 특징지워주는 “하비투스”(habitus)”, 그리고 이상의 것들을 매개로 해서 대상이 그려내는 궤적(즉, 지향점의 선택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실천적 전략들). 셋째, 이것이 사회적 “장들” 전체의 총체와 과정 속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여기에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자신의 객관화 작업, 즉 자기 반성적 작업도 포함된다).

보들레르와 플로베르

이 두 경향 사이에서 보들레르는 전자에 대해서는 경멸과 부정의 태도를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면서, 그는 대표적인 예술적 사례를 본다. 소설 속에 인물들의 배치와 행위가 예술과 정치 대립과 시업을 대립으로 하는 권력 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이러한 작품읽기에 착안해서, 인 해명 작업이 바로 부르디외의 <예술의 규칙>인데, 그러면 적어도 프랑스에서 주로 문학의 경우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단계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스스로 후보로 신청한 것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적 “임배행위(nomothéti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 주는 순수 미학주의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중립주의나 혹은 나ihil리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인간형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권위주의나 순응주의에 대한 거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근간인 노동과 생활의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난 등을 특 징으로 하는 “위대한 직업적 예술가”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율성을 획득하자, 문학은 그리고 나아가 예술은 이제 자기 내부에서 예술적 인 정, 둔, 정치적 축으로 해서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적 경쟁이나 이형 관계들을 보이는 상대 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들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이 스스로 자신의 장을 조직하는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는 순수 문학 대 대중 문학의 대립이라는 원칙인데, 이것은 당연히 문 문제를, 경제적 이익 문제를 반영한다. 그리고 둘째는 이 대해서는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면서, 그는 대표적인 예술적 사례를 본다. 소설 속에 인물들의 배치와 행위가 예술과 정치 대립과 시업을 대립으로 하는 권력 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이러한 작품읽기에 착안해서, 인 해명 작업이 바로 부르디외의 <예술의 규칙>인데, 그러면 적어도 프랑스에서 주로 문학의 경우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단계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재화(les biens symboliques)의 분질 자체에 근거를 두는 그 이전의 경계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러한 경계가 가능한 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징 가치와 상품 가치가 상대적으로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문학과 예술의 경계는 순수 예술의 반(反)경제적 논리 대 예술 산업의 경제 논리의 대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그렇다고 전자가 반드시 비경제적인 것, 이익을 못 넣는 것만은 아니다. 자기가치화와 자기 인정이라는 자율적 역사에 근거하는 순수 예술은 어떤 특정한 조건들에서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아주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학 시장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행위자로서 출판사는 이러한 대립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적절한 전략적 위치 선택을 한다. 한편에는 장기간을 바라보는 순수 문학의 출판사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단기간의 수익을 바라보는 출판사들이 있다. 문학의 입장에서서는 전자의 출판사들이 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문학 작품의 생산과 유통이 불확실성과 요행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후자의 출판사들의 경제 우선주의적 태도 역시 자신들이 출판하는 작품들이 상징적 자본으로 전환되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징적 생산물들의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 작가들, 비평가들, 출판사들, 화상들, 극장 감독들 등 — 상징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에 또는 양자 모두에 걸쳐서 유일하게 적합한 자본 축적 방식은 명성을 만든



초현실주의 시인 앙드레 브르통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

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자기가치화와 자율성에, 반(反)경제적 논리에 근거를 두는 새로운 아방가르드들과 기존의 시장 질서 사이에 역동적 관계가 발생하며, 이로부터 예술적 생산의 장에 세대 문학 작품의 생산과 유통이 불확실성과 요행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후자의 출판사들의 경제 우선주의적 태도 역시 자신들이 출판하는 작품들이 상징적 자본으로 전환되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징적 생산물들의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 작가들, 비평가들, 출판사들, 화상들, 극장 감독들 등 — 상징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에 또는 양자 모두에 걸쳐서 유일하게 적합한 자본 축적 방식은 명성을 만든

3. 자본주의 대 예술의 자율성

이상

과 같은 부르디외의 분석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좀더 일반화를 시도해 보면, 예술의 자율성은 현실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돼서 그 선도적 모형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자본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대다수 마르크스주의 문 화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가령 Raymond Williams, “Base and superstructure in Marxist cultural theory”, *New Left Review*, 82, 1973를 참조할 것).

그것은 오히려 비경제적인 것의 경제라는 고유한 구성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생산물들의 시장을 매개로 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예술적 생산의 물질적·경제적 한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한계 내에서 예술은 자신의 미적 원칙을 스스로 구성하고 결 정하며,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과 예술의 미적 원칙이 직접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시장을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균형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는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가령, 스탈린 시대부터 페레스트로이카 전까지 러시아의 경우, 파시즘 시기의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프랑코 독재 시대의 스페인 등,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위기가 폭압적인 정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때 예술의 자율성이 쉽사리 파괴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술의 자율성이 비록 역사적으로 19세기 서구 자본주의에서 사회적으로 가능한 현실적 동력을 얻었음직라도 그것이 자본주의와 예술의 자율성 사이에 어떤 내재적인 필연적 연관을 의미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 예술의 자율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의 부르디외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지배력은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꾀했으나, 이미 여기에 흡수될 수 없었던 젊은 예술가 지망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규범에 반항적인 보헤미안적 생활의 유행이 가능한 사회적·예술적 공간의 형성, 그리고 부르주아 출신의 말로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자기 계급에 대해서 던진 일종의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적 단결과 이에 대한 비평가들의 옹호 등과 같은 요인

들의 결합이 자본에 대한 예술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얻어난 예술의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창작”에 내포된 카리스마적 이기심인들의 유럽 문화라는 공통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확산돼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봉건 질서에 대해서 자본주의 질서가 갖는 발전적 측면이 예술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주아의 지배에 반항하는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독립적인 실천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이 선언에서 트로츠키의 서명은 그의 요청에 따라 디에고 리베라의 서명으로 대체되었다).

한편으로는 파시즘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의 자율성은 오히려 어떠한 경제적 제약이나 정치적 압력과도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예술의 이러한 자율성은 다시금 자본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부르디외와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정치적

으로 보수적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과 같은 작가들조차도 경고했던 현실이다(부르디외, <971 속의 문화>, 2000년 9월 서울 국제문화포럼의 발표문; 솔제니친, <문화는 고갈되었는가?>(1997), 계간지 <아시아>, 2009, 제12호에 번역 수록). 이들 이 경고하는 오늘날 현실의 부정적 양상들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국식 문화산업의 모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세계화하면서 문화적 생산물들은 오늘날 점점 더 문화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그 내용적인 고유성을 상실하고 획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가령, <노트르담의 꼽추>의 에스메랄다가 디즈니사에 의해서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나,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예술 작품들이 국제 교역에서 단순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 등을 생각해 보라).

둘째, 이와 맞물려서 문화적 생산과 유통을 점점 더 소수의 거대 자본들이 장악함으로써 문화 생산자들, 즉 예술가들은 점점 더 그들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더 직접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종속당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독자들에게서 미적 감수성의 평균화·동질화·수동화를 낳고 이것이 다시금 예술적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예술의 본원적 가치 — 즉, 현실과 개인의 삶 사이의 관계를 지각과 감수성의 층위에서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의미화함으로써 세계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 풍부하게 해 주는 것 —조차도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예술의 자유를 위한 투쟁

만일 현 단계 자본주의의 이러한 위험 앞에서 예술의 자율성이 패배한다면, 그 재앙은 단지 예술가들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극히 소수인 자본가들의 이익과 거기에 결합한 관료들, 언론도호들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기생적 이익 앞에서 인류 전체가 자신의 삶의 본원적 존엄성과 창조성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부르디외는 <예술의 규칙>의 “후기(Post-scriptum)”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보편자의 협동주의(une corporatisme de l’universel)”로 맞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통상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해 온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이제 그들이 속한 장의 고유한 자율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과 독자성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단결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동업자들의 집단적인 자기방어와 이기심의 발로로 비치지 않을 근거는 물론 예술과 학문이 갖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

그럼에도 켈리니코스카 올바르케 지적했듯이, 부르디외가 제안한 것과 같은 종류의 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상 권력과 자본에 대한 로비 수준의 압력으로 전략할 위험이 다분하다(A. Callinicos, “Social theory put to the test of politics”, *New Left Review*, 236, 1999).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실천보다는 차라리 초현실주의(surrealisme) 운동을 주도한 앙드레 브르통이 트로츠키와 함께 작성한 “독립적인 혁명적 예술을 위하여(Pour un art révolutionnaire indépendant, 1938)”라는 선언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이 선언에서 트로츠키의 서명은 그의 요청에 따라 디에고 리베라의 서명으로 대체되었다).

한편으로는 파시즘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의 자율성은 오히려 어떠한 경제적 제약이나 정치적 압력과도 태생적으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예술의 이러한 자율성은 다시금 자본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부르디외와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정치적

▶ 10편으로 이어짐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②

억압 — 마르크스주의는 “경제결정론”인가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운동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결정론”이라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문제를 경제와 계급 관계의 문제로 환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억압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샬리 캠펠**이 계급과 억압의 관계 문제를 설명한다.

언뜻 보면 계급 철폐가 억압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린다.

억압은 계급을 반영하지 않고 계급을 초월한다. 여성이라면 인도네시아의 공장 노동자이건 런던의 시티(금융가)에서 고액의 임금을 받는(남성 동료만큼 많이 받지는 않더라도) 금융 상품 딜러이건 간에 모두 여성 차별에 시달린다. 그러나 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겪는 억압의 경험은 부유층 여성의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

계급은 삶의 모든 측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불평등한 인간관계들, 가령 흑인과 백인,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계급 사회의 특수한 형태에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노동계급 여성이 자본가를 위해서 하는 구실은 분명하다. 노동계급 여성은 육아(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기르는 일)와 가사(자신을 포함해 현재 세대의 노동자를 돌보는 일)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고, 사랑 때문에 또는 필요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 반면 지배계급 여성은 노동계급 여성을 고용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킨다.

억압받는 자들 내부에서 단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 내부에 계급 분열이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여성들도 여성 차별에 시달리지만 그들은 자기 계급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파리 코뮌 당시 파리의 부유층 여성들은 군대가 코뮌을 분쇄한 것을 축하하면서, 코뮌을 지지한 여성 전사들의 눈을 우산으로 찔렀다. 마거릿 대처는 여성 차별적 욕설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대처의 정책은 수많은 노동계급 여성을 절망에 빠뜨렸다.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흑인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남성 노동자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레프트21) 자료 사진

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피억압 집단들이 자동으로 단결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억압받고 무슬람이 억압받는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함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황은 그 반대일 수 있다. 공격받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분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사상, 즉 우리를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열시켜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 지배자들과 우리를 단결시키려고 하는 사상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마르크스주의를 경제결정론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탈린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엄격하게 위계적인 옛 소련을 옹호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에서 심

장과 내장과 뇌를 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직된 “이론”을 만들었다.

왜곡

마르크스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서 출발했지만, 그가 말한 경제적 토대는 삶 자체의 생산과 재산을 의미했을 뿐이다. 인간은 먹고 입고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항상 집단으로 노동했다. 그리고 계급 사회 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모든 것, 즉 정치에서 예술, 심지어 자녀 양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 과정은 아니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려다가 더한층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정치 투쟁이 새로운 경제 발전

을 위한 길을 열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설명한 역사란 그런 것이다. 즉, 많은 전선에서 투쟁이 벌어지지만 생산 조직 방식이 일차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생산에서 하는 집단적 구실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만국의 억압받는 자들이여 단결하라!” 하고 말하지 않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집단적 힘이 인류 전체를 해방시킬 혁명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혐오 따위의 후진적인 사상을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집단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흑인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함께 행동한다는 것이다.

억압을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억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로 분열된 집단이라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단결된 계급이라는 우리의 강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런던 남쪽의 흑인 소년이나 방글라데시의 굶주린 여인에게 해결책은 따로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바로 문제이며 혁명이 그 해답이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함께 싸워서 얻는 신뢰감, 투쟁의 경험이다. 혁명의 경험은 이런 과정을 엄청나게 단속시킨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 직후 몇 달 동안 여성들은 투표권과 공직에 임후보할 권리를 얻었다. 낙태는 합법화되고 이혼도 허용됐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게 됐고 동방의 민족들에게 종교와 언어의 자유가 허용됐다. 얼마 전까지 유대인을 억압하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소비에트들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것은 계몽된 불세비키가 후진적인 사람들을 대리해서 정책을 통과시킨 결과가 아니라 대중이 그들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능동적으로 개입한 결과였다. 일상생활의 온갖 문제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나 이주 노동자를 위협하는 인종 차별주의자 같은 가장 흔한 억압의 경험에 대해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1923년에 트로츠키는 혁명 과정에서 변화한 가정의 구실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썼다. 왜냐하면 “전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노동계급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심각한 갈등을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는 선진 노동자의 다수가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고 이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어서 이들 가정의 모든 비극이 많은 사람들의 논평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수의 통제에서 해방시키는 혁명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도 해방시킨다. 그리하여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

번역 천형석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2008년 9월호

▶ 9면에서 이어짐

수립할 책임이 있다면, 지적 창조를 위해서는 바로 그 처음부터 지적 자유의 **아나 키즘적** 체제를 확립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제약도, 티끌만 한 지휘감독도 없어야 한다! 전에는 결코 없었을 실로 장대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일할 다양한 지식인 모임들과 예술가 집단들은 외부의 티끌만 한 제약도 없이 오직 자유로운 창조적 우애의 기반 위에서만 출현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결실을 맺는 작업을 펼칠 수 있다.”

사실 “선언”의 이러한 전망은 1920년대 전반기 소비에트 러시아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좀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행기에 우리의 예술 정책은 혁명의 토양 위에 나타난 상이한 예술 단체들과 경향들로 하여금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 모두에게 혁명에 찬성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예술적 자기결정의 영역에서 전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래야 한다.”

(《문학과 혁명》 *Литература и революция*, Москва: Красная Новь, 1923);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의 전함과 실천에서 예술의 자유는 명백히 반혁명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옹호돼야 하며, 마찬가지로 진지한 예술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들 역시 예술의 자유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인간의 해방이라는 궁극적이고 보편적 전망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선언”의 마지막 구절처럼, ‘예술의 독립은 혁명을 위한 것이고 혁명은 예술의 결정적 해방을 위한 것’일 때, 위협받는 자신들의 자율성을 위한 예술가들의 집단적 투쟁은 사회적으로 더욱 풍부한 의미를, 그리고 실천적으로 더욱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적 지향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예술적 입장이나 분파가 — 가령,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이나 민중 예술론 등처럼 — 혁명적 대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경우조차 그것이 예술가들의 집단적 투쟁에서 독점적인, 혹은 지도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창작과 비평 이념이 — 가령, 스탈린 시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같은 괴물이나 이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비판적 리얼리즘 등처럼 — 마치 감독관 구실을 하게 되면서 예술의 자율성 자체가 훼손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문학과 혁명》

이 점을 예증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령 1924년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트로츠키가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자들과 벌인 논쟁인데(이 텍스트는 그의 《문학과 혁명》 *Литература и революция*)의 2판(Москва: Гос. Изд., 1924)에 수록돼 있다), 거기서 그는 당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예술의 창조성이란 자율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며, 앞서 부르디외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 자율성은 역사적으로 예술가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 또는 경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장”의 형성과 더불어 집단적으로 쟁취된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예술의 자율성에 관한 한국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국 문학의 경우 부르디외의 식의 문학 “장”이 외형적으로나마 형성된 것은 아마도 1930년대일 것이다. 이 시기에는 문학성에 대한 근대적인 독자적 기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을 축으로 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경쟁적으로 공존하면서 문필가들의 상징적인 권력 또한 식민지 지배층이나 대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의해서 일정한 주제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북한의 경우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면, 남한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 지식인들이 동참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비로소 외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내실을 갖춘

문학·예술·학문의 자율적인 “장”들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규제와 권력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탄압은 비록 그 적용 범위와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어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은 IMF 사태로 이어지면서 많은 출판사들과 영세한 문화생산업자들이 도산하게 되며, 문화 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작가, 예술가, 지식인 같은 문화 생산자들은 더욱더 유통업자나 기획자들 그리고 대형 미디어 등이 요구하는 상업적 이익에 종속됐다. 더구나 한층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강화된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의 급서 조치나 교과서 파문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조치에 의해서 한층 더 침해당할 위험이 커진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짙막한 개괄에서, 한국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이유인 예술과 학문의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집단적 투쟁과 실천적 전망이 요구되는지는 자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섹시’ 열풍,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 다른 얼굴인가?

오늘날 우리는 성적 이미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S라인이니 섹시 퀸이니 환상의 누드니 하는 섹시 타령이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술, 무용, 뮤지컬 등 문화 예술에서도 ‘섹시 코드’가 유행이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우리는 이효리가 짧은 상의와 팬츠를 입고 허리를 희한하게 꺾고 있는 광고판을 보게 된다.

성 상품화가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성매매나 포르노 등 상업화된 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성의 상업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성매매 같은 전통적 형태의 상업적 성이 계속 번성할 뿐 아니라 주류 문화 자체가 포르노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몇 년 새 인기 여성 연예인들이 앞 다퉈 누드 화보집을 냈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에로 배우’나 하는 일로 여겨졌다.

여성의 육체적 매력은 단지 ‘외모가 근사하다’라는 수준을 넘어 부와 인생의 성공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플레이모델 출신 이파니는 방송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했고 최근 가수로도 활동중이다. 곧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대의 나이에 ‘섹시한 몸’ 하나로 성공을 거머쥔 듯한 이파니는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섹시하다’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히트한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자유와 해방?

그러나 이러한 섹시 열풍이 정말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뜻할까?

지난 20여 년 동안 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한층 개방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여성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데서 더 많은 자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1960년대만 해도 여성들은 단속 때문에 미니스커트도 마음대로 못 입었다. 혼전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았고 피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아이를 평균 6명씩 낳았고 이혼 여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다. 교육을 받거나 직업이 있는 여성들은 드물었다.

오늘날 여성들의 삶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됐고 직장에 다니게 됐다. 피임도 대중화해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는 평균 1명밖에 되지 않는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터부는 크게 약해졌고 결혼은 감소하고 이혼이 늘어났다. 동거나 독신도 늘어났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누리는 성적 자유는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 비해서 훨씬 확대됐다. 사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성 개방과 자유화가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0여 년은 여성들이 자신을 옥죄는 고정관념에 더욱 사로잡히게 된 기간이기도 하다.

성이 인간의 속성에서 분리돼 물건처럼 사고팔리면서 성관계와 성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 섹스는 사랑이나 따뜻함, 친밀함과 무관한 단순한 정육의 분출로만 여겨진다. 여성들을 눈요깃거리로 보는 풍조도 팽배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한다.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미의 추구가 아니라 억압일 뿐이다.

‘섹시함’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고 있다.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게 유행이고, 골반·배꼽·종아리 수술 등 온갖 성형 수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04년 보건복지부는 여대생 중 절반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성형수술 열풍은 청소년들에게도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뛰어 들고 있다.

그뿐 아니다. 오늘날은 나이든 여성들도 섹시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이 들어도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는 여성 연예인들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언론에 넘쳐난다. ‘비키니 입은 황신혜는 47살인데도 20대처럼 보인다’, ‘육감적인 몸매의 김혜수와 청순미·섹시미를 동시에 지닌 전도연이 40이 다 돼 가는 나이’라는 등 난리다.

성형수술이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치

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무시하고 수술대에 오르는 여성들이 허다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거식증에 걸리고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들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여성들의 허영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때문이다. 패션 산업, 식품 산업, 제약회사, 병원, 화장품 회사, 헬스 기기 판매 회사, TV, 인터넷방송, 신문·잡지사 등 온갖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날선하고 ‘섹시한’ 몸을 갖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

장시간 근무, 과도한 육아와 학업 부담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운동할 시간을 빼앗긴 채 온갖 화학첨가물을 범범한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렇게 해서 살찐 여성들은 다시 다이어트 산업의 먹잇감이 된다. 여성들이 황신혜, 이효리, 원더걸스, 소녀시대를 닮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사고 헬스클럽에 가고 수술대에 오르는 동안 기업들의 이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다이어트와 화장품 산업 매출액이 최소 10조 원이라 한다.

성형이나 다이어트는 흔히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로 여겨진다. 최근 케이블 TV에서 방영중인 ‘다이어트 War 시즌 3’의 메시지도 이것이다. ‘똥똥한’ 여성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살 빼는 과정을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으로 보여 주는 이 프로그램은 다이어트를 마치 마법인양 다룬다.

참가자 중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였다가 이혼 충격으로 20kg이나 늘어난 이하얀이 있었고,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상처받으면서 몸무게가 엄청나게 불어난 여성도 있었다. 방송은 다이어트가 ‘자기 치유 과정’이라고 말했고, 참가자들은 다이어트

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여성을 몸무게와 사이즈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똥똥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똥똥한’ 여성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는 마치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까? 날씬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 반지하를 전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삶의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또, 이상적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것도 끝날까?

다이어트나 성형수술로 여성의 변신을 도와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송중이다. 하지만 남성 임금의 60퍼센트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승진에서는 번번이 밀려 맨날 하위직에 머물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부모와 친척들에게 사정하러 다니고, 해고자가 된 남편과 치솟는 대학 등록금 걱정에 파출부로 일해야 하는 보통의 노동계급 여성들이 과연 다이어트나 성형을 통해 인생여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케케묵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재탕삼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여성의 성공을 돕는 존재는 왕자가 아니라 트레이너와 의사라는 것뿐이다.

저항

우리는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반대해야 한다. 미스코리아 대회나 수퍼모델 대회에 나오는 여성의 외모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사실 영화배우나 탤런트, 모델 등에서 발견되는 ‘명품몸매’는 대개 값비싼 개인 트레이너, 성형외과 의사, 미용실의 도움으로 탄생한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몸매를 여성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미의 추구가 아니라 억압이다.

단순히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자는 소박한 생각으로 는 광범하고 거센 성 상품화 물결을 헤쳐갈 수 없다. 문제는 자긍심 없는 여성 개인이 아니라 몸무게와 사이즈로 여성을 평가하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에 있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성 상품화와 여성 몸에 대한 왜곡, 그리고 성적 억압에 항의해 왔다. 1980년대 말에 미스코리아 폐지 운동이 일어났고, 1990년대에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여성의 외모를 채용 심사에 반영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이 법으로 금지된 지 각각 15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폭력과 성희롱은 끊이지도 자주 일어난다. 운동의 성과로 미스코리아 대회가 공중파 방송에서 사라졌지만 미스코리아 대회를 포함해 1백 개가 넘는 미인 대회가 여전히 해마다 열린다. 성 상품화와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도리어 강화됐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성 차별의 근원, 즉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양육과 노인, 환자 돌보기 같은 일을 개별 가정에 떠넘김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여성 차별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성 해방이 단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만을 뜻할 수는 없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이 말하듯, 여자도 남자를 섹스 파트너로만 여기고 많은 사람과 섹스를 즐기는 게 성 해방은 아닌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인간의 성애와 성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성 해방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모순적이다. 성이 노골적인 상품인 동시에 성적 보수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섹스 얘기가 폭발하고 있지만, 성은 여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토론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성 해방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동안 사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거대한 변혁운동이 일어나면 경제와 정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성의 자유와 여성 해방은 이러한 운동들에서 거듭 부상한 요구였다.

여성들은 위대한 운동에서 늘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지난해 촛불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에 주목했다. 최근 파업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파업에서 그랬고, 무엇보다 쌍용차 공장점거 투쟁에서 가족대책위의 용감한 투쟁을 보라.

이러한 힘은 성 상품화와 여성 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노동계급이 체제를 뒤흔드는 저항을 할 때 우리는 사회의 생산방식과 사람들의 생활방식까지 바꾸는 **총체적인** 변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진희

책갈피 출판사 신간 책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책갈피 출판사 제공



《레닌 평전 2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토니 클리프 지음 | 이수현 옮김 | 21,000원

2000년에 작고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본명은 이가엘 글록스타인)가 쓴 이 책은 레닌의 정치적 전기다. 특히,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의 러시아 혁명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레닌의 모습은 옛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해석과도 다르고 최근 슬라보예 지젝이나 일부 자율주의자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것과도 다르다. 전자가 레닌을 당대 현실을 초월

한 성인(聖人)처럼 묘사하고 그의 말과 글을 종교 경전이나 교리처럼 떠받든다면, 후자의 해석은 나름대로 색다르고 독특하지만 대부분 제 눈에 물대기에 가까운 듯하다.

그와 달리 이 책은 러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사료와 문헌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분석한 바탕 위에서 1960년대 이후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역사학 같은 사회사적 연구 성과도 흡수해서 레닌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로 보여 준다. 그래서 레닌의 오류와 한계를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그의 정치적 장점과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 신화와 사뭇 달리 볼셰비키당은 레닌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10월 혁명 직전에도 레닌은 무장봉기에 반대하는 핵심 측근들의 ‘사보타주’에 부딪혔다! 그런 당과 함께 노동계급에게 배우고 노동계급을 이끌면서 갖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장대한 드라마다.

지은이는 트로츠키가 쓴 《러시아 혁명사》도 불후의 명작이지만 아쉽게도당을 과소평가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레닌은 당이라는 중간 톱니바퀴를 이용해 노동계급 대중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켰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계급과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켰다. 그런 전략·전술이 혁명의 격변기에 투쟁이 급격하게 고양되거나 갑자기 후퇴할

때 어떻게 ‘예측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지난해 촛불항쟁이나 최근 이란 민주화 항쟁의 부침을 보면서 운동의 동역학과 투쟁의 전략·전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까닭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제국주의 세계 대전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던 20세기 초에 착취와 억압, 소외와 빈곤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러시아와 세계 혁명의 성공을 위해 분투했다. 21세기 초에도 유례없이 심각한 경제 위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제국주의 만행도 여전하다. 따라서 더 나은 세계를 염원하며 진지하게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레닌의 사상과 실천에서 오늘의 운동을 위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은 국내에서 2004년에 출간된 《당 건설을 향하여 : 레닌 1893~1914》(북막스)의 후속편이다. 책갈피 출판사는 《레닌 평전 1 : 당 건설을 향하여》를 잘 다듬어서 조만간 3권과 함께 출간할 예정이고, 4권도 2009년 안에 출간하려고 노력중이다.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시리즈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의 가치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스·마이클 엘버트 지음 | 이수현 옮김 | 5,500원

이 책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책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2003)과 마이클 엘버트의 책 《파레론 :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북로드, 2002) 출판을 계기로 2003년 12월 8일부터 25일까지 두 사람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논쟁 글을 번역한 것이다.

캘리니코스가 이야기하는 반자본주의의 가치는 정의·효율성·민주주의·지속가능성이고 엘버트가 주장하는 가치는 연대·다양성·평등·자율관리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약간) 다르게 개념 정리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의와 보상의 논리를 둘러싼 견해 차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와 볼셰비즘,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 국가자본주의와 조정자 계급, 참여 경제, 변혁 전략 등에 대해서도 때로는 현격한, 때로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을 펼친다.

그러나 마치는 글에서 서로 인정하듯이, 두 사람은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현재의 억압에 맞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고 생산자·소비자 평의회와 자율관리를 옹호하고 시장과 위계적 계획에 반대하는 등 공통점도 많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이라는 점 때문에, 비록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들도 등장하지만 은근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좌파의 재구성 and 변혁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최일봉·이수현 옮김 | 9,000원

올해 초 프랑스에서 출범한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국내외 많은 좌파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NPA는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과 나중의 국제 반전 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진행된 좌파의 재구성, 특히 ‘급진 좌파’ 재결집의 최근 현상일 뿐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독일의 디링게(좌파), 영국의 리스펙트(와 스코틀랜드 사회당),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덴마크의 적녹동맹, 그리스의 쉬나스피스모스 등 다양한 좌파 재결집체가 생겨나 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다. 따지고 보면, 2000년의 한국 민주노동당 창당도 급진 좌파 재결집이라는 국제적 맥락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시애틀 시위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진정한 사회주의 좌파가 추구해야 할 전략과 전술, 강령, 활동 방식 등에 대해 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지은이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의 급진적 사회운동이 쇠퇴함에 따라 좌파 내에서 사라졌던 전략 논쟁이 오늘날 되살아난 것을 반기면서 “20세기의 혁명적 위기들”에서 끌어낼 수 있는 특정한 전략적 교훈들을 제시한다. 물론 이런 교훈이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전략적 유산을 배타적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혁명적 좌파는 다양한 이질적 세력들과 함께 개방적으로 현실의 운동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명확성과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조직과 활동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NGO의 사상 and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지음 | 6,900원

지은이가 지난 10년 동안 이리저리한 연대 운동 단체 안에서 NGO의 주장과 실천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한국 NGO에 대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서다.

NGO를 체제의 부속물쯤으로 치부하는 일부 좌파들과 달리 지은이는 NGO를 개혁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

“NGO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전망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해 정의·평등·공공체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혁주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분석은 한국 시민운동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 즉 옛 소련 블록의 붕괴 이후 활동가들 사이에 깊게 퍼진 낙담과 대안 부재와 혼란을 배경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한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시민운동의 주요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수용한 시민사회론과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다루고, 한국 NGO의 실천 유형과 그 문제점·한계를 살펴본 뒤 경제·정치 위기 상황에서 개혁주의가 직면한 위기라는 관점에서 시민운동의 위기를 조명하며 글을 맺는다.

그러나 지은이는 “개혁주의가 위기인 동시에 여전히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제의 위기가 낳은 공포와 환멸은 오히려 개혁주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고, NGO가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GO와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 진정한 정의와 평등을 원한다면 NGO의 비전과 방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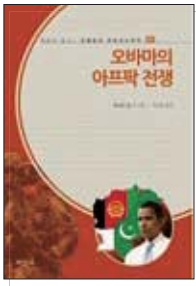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크리스 하먼 지음 | 이수현 옮김 | 5,900원

마르크스주의 용어인 ‘제국주의’라는 낱말은 이제 강대국의 횡포를 뜻하는 정도의 말로 누구나 느슨하게 사용하는 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동역학으로 움직이는지는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크리스 하먼의 이 짧은 소책자는 이러한 다양한 ‘제국주의론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는 데서 출발한다. 이 논쟁은 역사가 제법 길다. 레닌이 유명한 소책자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쓴 것 자체가 카우츠키의 ‘초(超)제국주의론’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레닌, 부하린, 흡슨, 카우츠키, 힐퍼딩, 로자 룩셈부르크 등 당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동역학을 각각 다르게 설명했고 강조점도 달랐다.

크리스 하먼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스탈린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얼마나 앙상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폴 바란과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종속이론으로 이어졌는지도 보여 준다. 또, 이 종속이론과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오늘날의 자율주의 ‘제국’론이 모두 결국은 레닌이 그토록 비판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의 변형이거나 재탕일 뿐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이 책은 레닌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철저하게 살핀다. 또한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 냉전 시대,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의 제국주의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파고든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상식으로 통하는 주장들이 대체로 부정확하거나 과장돼 있음을 밝히는 부분은 꼭 읽어 볼 만하다.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조너선 닐 외 지음 | 차승일 옮김 | 5,000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하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전쟁 지원을 종용하고 있다.

‘혈맹’인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도 재파병을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른바 ‘아프파 전쟁’이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건’이 필요하며 따라서 점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외국 군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탈레반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조너선 닐은 1970년대에 인류학자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들과 동고동락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의 처지에서 본 전쟁의 현실을 드러낸다.

미국인 사회주의자 데이비드 화이트 화우스는 고통으로 점철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미국의 관계를 살펴보며 오바마가 말하는 ‘재건’의 진정한 의미를 들춰낸다.

영국 사회주의자 제프 브라운과 파키스탄 활동가 아심 잔은 파키스탄이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라고 지적한다.

네 명의 저자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의 진실을 들려준다.

리뷰



“‘무한 경쟁주의’의 지
옥에서 ‘왼쪽’으로의 행
진만이 우리의 미래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온 박노자 교수는 새 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에서도 비판의 칼날을 놓지 않는다. 이 책은 그의 다른 저작들처럼 예리한 비판, 섬세한 감수성, 풍부한 사례로 가득하다.

그는 삼질과 수출에 목매며 “시대착오적인 토건 국가, 수출 국가, 안보 국가 모델”을 고수하는 이명박을 매섭게 비판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박노자는 ‘기업의 준독재’ 상황인 한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자유’란 “기업인들이 여성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자유’”라고 꼬집는다.

그는 사회적 불만을 ‘경찰 출동’으로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이런 ‘퇴행’은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경제 위기 때문에 온갖 사회적 갈등이 “초고속으로 첨예화”할 것이라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이명박의 입기는 ‘밀’으로부터”의 항쟁으로 점철될 것”이라 예측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재벌, 대물림되는 교육 체계와 기업의 지배로 얼룩진 ‘명문’ 대학교,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장사하는 종교인 등 박노자의 비판에는 성역이 없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10년간의 ‘개혁’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 폐지, 비리 척결로 관료제 개선, 재벌에 대한 적당한 규제, 부동산 투기 방지 등에서 ‘개혁’ 정부가 성취한 것은 ‘햇볕 정책’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온건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적·사회민주주의적 세력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노자의 주장이다.

그가 제시하는 급진적 개혁은 대형 기업의 국유화, ‘토건 국가 예산’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전환해 무상교육·무상으로 실현, 각종 부유세 징수,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재산 몰수, 대학 평준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국방 예산 삭감 등이 다.

박노자는 이런 ‘질적 변화’를 만들 주체 세력은 진보 정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 정당의 의회 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밀으로부터의 직접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 한겨레출판, 2009년, 12,000원, 323쪽)

급진적 개혁주의자가 본 대한민국

즉,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의 총궐기, 의료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의 파업, 동시다발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같은 대중 행동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강조하면서도 박노자는 이런 행동을 한사코 혁명과는 연결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준핵심부 나라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낮”은 반면 그가 제시하는 급진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는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노자의 주장처럼 급진적 개혁을 이루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이 체제 자체에 도전할만큼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투쟁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을 완전히 종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급진 개혁 요구를 따내고 투쟁을 멈춰야 하는가?

하물며 세계적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개혁’을 양보할 여지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체제 자체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급진적 개혁 요구조차 성취할 수 없다.

대중 행동

박노자의 ‘혁명 불가론’은 역사적으로 혁명은 반드시 전제로 귀결되고 도살, 겁탈, 강간 등의 야만적 상황이 뒤따른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급진적 개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 과정의 안타까운 ‘유혈 사태’는 권력과 부를 순수히 내주지 않으려는 지배계급의 반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사회 진보를 바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때 지배계급은 철차적 민주주의 파괴는 물론이고 언제든지 물리력을 동원해 ‘피’를 볼 준비가 돼 있다.

쌍용차 파업을 분쇄하기 위한 이 사회 지배자들의 온갖 악질적인 행태를 보라. 하물며 한 공장 문제에서도 이토록 잔인할진대 국가 전체의 권력이 걸린 문제에서 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런 ‘유혈 사태’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의 봉기는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봉기였기 때문이다. 그 후에 나타난 ‘도살, 겁탈, 강간’ 등 잔혹한 살상과 폭력의 책임도 노동자 권력을 파괴하고 자본주의로 돌아가려는 반혁명 세력에 있었다.

이것은 급진 개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973년 칠레의 기업주와 군 장성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급진 개혁을 추구한 온건 사회주의자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에 저항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결국 아옌데는 죽임을 당하고 노조 대표자들과 좌파 활동가 등 3만 명이 학살됐다.

결국 박노자가 끔찍히 증오하는 자본주의의 폭력과 빈곤, 불평등을 종식시키려면 혁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폭력을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얼마나 강력히 단결해서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그동안 민족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해 온 박노자가 이번에는 그 비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반미’ ‘통일’ 등 아무런 현실적 내용도 없는 낭만적 구호들을 외쳐대는 것은 이명박류의 흑색무민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이명박에 맞서 투쟁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졸지에 이명박과 비슷한 수준이 돼 버렸으니 아마 이런 주장을 들고 가장 놀랄 사람은 이명박일 것이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반미’ 투쟁은 반제국주의 저항의 일부다. 제국주의 열강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은 “낭만적 구호”이기는커녕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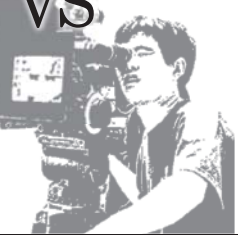
따라서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이명박에 맞서 함께 투쟁하면서 비판과 토론을 통해 그들의 악점과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단순히 거친 언사로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는 한국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좋은 책이다. 무엇보다도 박노자의 사회 진보에 대한 변함없는 열망과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사회 변혁에 대한 반대를 비롯한 몇몇 아쉬운 부분 때문에 그의 예전 책들보다는 감흥이 다소 덜하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우원석 영화칼럼

찰리 채플린 VS 버스터 키튼



가요팬들 사이에 소녀시대가 낫냐, 원더걸스가 낫냐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 영화팬들 사이에도 이런 종류의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성 영화의 두 거장,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중에서 누가 더 웃기느냐 하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전성기가 겹친다. 둘 다 1910년대 후반 인기를 얻기 시작해 1920년대 절정의 시절을 누렸다. 당시 영화팬들은 누가 더 웃기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라운드는 찰리 채플린의 승리였다. 유명영화가 대세가 된 1930년대에 버스터 키튼은 몰락했다.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1936), <위대한 독재자>(1940) 등 걸작들을 계속 내놓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버스터 키튼이 재평가되면서, 끝난 줄 알았던 논쟁은 2라운드를 맞이했다. 이번 라운드의 대결은 지금까지도 팽팽하다. 둘 다 죽었으니 순전히 작품 대 작품으로 웃음의 우월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이 선사하는 웃음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니 단순 비교해서 승자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웃음은 어떻게 다를까. 찰리 채플린의 경우, 그의 웃음은 피눈물 섞인 웃음이다. 그의 영화들은 빈곤, 착취, 억압 등으로 얼룩진 사회상, 즉 비극을 배경으로 삼고 여기에 떠돌이 캐릭터, 즉 희극을 얹어 놓는다. 캐릭터와 배경은 영화 속에서 서로 어긋나고 부딪힌다. 이런 충돌에서 생기는 희극과 비극의 부조화가 단순한 개그 이상의 웃음과 감동을 자아낸다.

가령 <키드>(1921)에서 아이가 경찰에게 끌려가자 떠돌이(채플린)가 이를 막으려는 장면을 보자. 채플린은 아이의 클로즈업(가까이에서 잡은 화면)과 떠돌이의 롱 쇼트(멀찍어서 잡은 화면)를 연속 교차한다. 우는 아이의 얼굴을 담은 클로즈업은 비극적이고, 떠돌이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붕 위를 뛰어 올라가다가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지는 롱 쇼트는 희극적이다. 채플린은 이를 통해 삶의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영화적으로 멋지게 표현한다. 희비극의 교차가 자아내는 풍성한 감정, 즉 웃기지만 눈물이 나오고 슬프지만 배꼽을 잡게 되는 심오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반면, 버스터 키튼의 웃음은 경탄 섞인 웃음이다. 그의 영화들은 스토리를 따져보면 너무 단순하다. 당대의 현실과도 관련이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포커페이스는 묘한 시적 분위기를 풍긴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기계, 바람, 폭포 등에 맞서는 그의 연약한 몸통이 선사하는 웃음은 곡예에 가까운 몸동작 연기와 결합되어 경탄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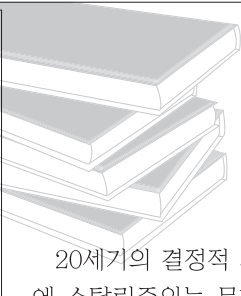
가령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인 <제너럴>(1927)의 기차 추격 장면을 보자. 미국의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북군은 버스터 키튼이 사랑하는 여자를 납치해 기차를 타고 도주한다. 버스터 키튼은 다른 기차를 타고 맹렬히 뒤쫓는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곡예들은 풍부한 시각적 상상력과 탁월한 장인 정신을 보여 준다. 그의 웃음은 찰리 채플린과 달리 온전히 시각적인 쾌감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일부 영화광들은 버스터 키튼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어떤 웃음이 더 우월하느냐 하는 문제에 쉬운 답은 없다. 다만 나는 찰리 채플린의 웃음이 지금과 달리 외면 받는 시대가 오길 바랄 뿐이다. 그의 유머는 빈곤, 착취, 억압 등 현실의 비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웃음이다. 그래서 그런 비극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면, 그 시대의 관객들은 그의 피눈물 섞인 웃음을 지금의 우리들처럼 뼈저리게 공감할 리 없다. 비극을 체험할 수 없는 사회의 관객들은 그의 비극적인 유머를 이해 못할 것이고, 그래서 멀리할 것이다.

현실의 비극들이 종식될 시대를 고대한다. 찰리 채플린이 외면당할 시대를 소망한다.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20세기의 결정적 시
기에 스탈린주의는 문학과
예술에서 핵심 문제였다.

왜냐하면 잊혀진 목소리를 표현하려 한 대다수 사람들은 스탈린주의가 그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조차 러시아에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회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모더니즘 시도들은 1934년 소비에트작가회의가 선정한 교리 때문에 질식사했다. 공식 용어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렸는데,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 등에서 아사하고 있는데도 인민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통계 수치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었다.

존 버거가 지적했듯이, 스탈린주의 시대에 시각 예술은 한 세기 전 궁중 회화의 전도였다. 웃고 있는 말쑥한 차림의 농민과 노동자가 한때 왕과 황제에게 그랬듯이, 용맹스럽게 묘사된 당 지도자들을 경축한다.

그런 작품으로 펜과 붓을 더럽히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 좋으면 출판사와 갤러리에서 거부당하는 정도였고 운이 나쁘면 이삭 바벨처럼 굴라크(강제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트래비스 홀랜드의 《사라진 원고》는 이삭 바벨을 모티브로 삼은 소설이다.

이삭 바벨은 초기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의 최고 작가 중 한 명이다. 1894년 흑해의 변장한 항구 오데사에서 태어나 유대인 마을(shtetl)에서 자란

《사라진 원고》(트래비스 홀랜드 지음, 정병선 옮김, 난장이, 12,000원, 384쪽)

인간 영혼의 거대한 무덤을 고발하다

바벨은 1916년에 제1차세계대전의 혼란 한복판에 있던 도시 페트로그라드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의 주요 좌파 작가인 막심 고리키를 만났다. 고리키는 바벨에게 글쓰기를 권했다. 고리키는 바벨의 예리하고 사실주의적인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삶에 더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바벨은 20세기 가장 참혹했던 러시아—폴란드 전쟁에 참여했다. 1920년 여름 폴란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후원을 받아, 내전으로 기진맥진한 소비에트 공화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몇 달 동안 유대인 바벨은 잔인무도한 반유대주의자 카자크 병사들 속에서 살았고 글을 썼다.

바벨의 대표작 <적군 기병대>(국내에는 지만지 고전천줄에서 《기병대》라는 이름으로 부분 번역했다)는 이 경험에 바탕한 것이다. <적군 기병대>는 반쯤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단편 40개 모음집이다. 모더니즘 스타일의 이 소설은 폴란드 전쟁의 무용담보다는 전쟁의 끔찍한 참상, 약탈, 살육, 강간 등을 묵묵히 다룬다. 책은 출판 즉시 성공을 거뒀고 바벨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나치 시대 독일에서는 급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적군 기병대의 유명한 지휘관인 부조니는 이 소설에 맹공을 퍼부었다. 다른 삼급자들도 자신들을 알팍한 인물로 묘사한 것에 화를 냈다.

스탈린 독재가 강화되자 1934년 소비에트작가회의에서 바벨은 스스로를 “‘문학적 침묵’이

라는] 장르의 대가”라고 칭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함축했다. 여기에 <적군 기병대> 때문에 생겨난 강력한 적들도 있었다. 결국 바벨은 1939년 5월 체포됐고, 1940년 초에 루반카 감옥에서 숨을 거뒀다.

바벨의 작품들에는 제1차세계대전 전야, 내전, 스탈린 치하에서 질식사당한 모스크바의 혁명, 강제집산화 초기 우크라이나 등의 러시아가 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환상 없이 소비에트 권력을 지지했다.

홀랜드가 이삭 바벨의 전기적 사실에 바탕해 쓴 《사라진 원고》에는 바벨이 체포당한 시기, 1939년의 모스크바가 암울하게 묘사돼 있다. 악명 높은 루반카 감옥, 스탈린—히틀러 불가침조약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신문 기사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에 침묵하는 ‘사회주의’ 언론들,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노동자들.

그러나 스탈린 체제에 대한 조롱과 저항도 있다. 공문서 관리인인 주인공 파벨은 엄청난 개인 사적 비극을 낳을지도 모를 저항, 즉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바벨의 원고를 숨겨 후대에 전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소설을 보면서 과거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공포를 지시한다면, 그 공포는 우리 시대의 것과 너무나 흡사해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인식 kis@left21.com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인가

《문화과학》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 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요즘 과연 파시즘이 오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이후 인터넷에서 이명박과 파시즘을 연관 짓는 다양한 창작물들이 넘쳐났다. 주로 재기 넘치는 젊은 이들이 만든 이 표현물들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가 큰 충격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명박=파시즘”론은 엄밀한 학문적 정의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레토릭(수사) 차원이었다. 지난해 <한겨레21>(725호)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명박과 히틀러를 나란히 세워 놓고 ‘파시즘의 전주곡’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맞든 틀리든 ‘파시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화해나 타협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장점은 있다. 이명박이 파시즘이라면 “퇴진”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정권과 정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광일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그것에 선택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장 합법적이기에 가장 설득력이 없는 주장”(《문화과학》여름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퇴진 구호와 요구는 촛불 항쟁 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고 광범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파시즘을 느슨하고 부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느슨하고 부정확한 정의에 따라 노무현 정부조차 공개적으로 ‘파시즘’이라고 비판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2003년 부안(핵폐기장)과 2006년 평택(미군기지)은 폭압적 시위 진압이 매일 벌어졌다.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파시즘’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 특히 언론과 인권 문제에 주목한다. EBS의 지식e-채널은 이명박의 언론 정책을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와 연관시켰다. 최근 리영희 교수가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신자유주의 파시즘”론은 느슨한 파시즘 용어법의 좌파 버전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고민택 씨는 “‘파쇼적’이라 할 때, ... 그것은 자본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무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파시즘’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



1930년대 독일 나치 집회 파시즘을 단순히 권위주의나 독재 정부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기 못하게 할 수 있다

엇으로 전가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문화과학》여름호)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제복 입은 독재자 대신 시장이 전체주의 지배자 노릇을 한다. 이리 되면 자본주의가 바로 ‘파시즘’이다.

이런 점에서 “파시즘을 정확한 기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종의 유행어로 안이하게 남발하는 것은 파시즘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의 독성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조효제 교수)는 지적은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파시즘을 역사적·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역사적 파시즘’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소자산가들부터 파탄 낸다. 대자본에 맞설 권력 자원도 없고, 노동계급처럼 스스로 조직해 집단적 힘을 발휘할 처지도 안 되는 소자산가들은 자본주의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 중간계급이 파시즘 대중운동의 주역이다. 첨예한 위기의 시대에 몰락하는 이들 중간계급은 대자본과 노동계급을 모두 비난하며 행동한다. 그래서 이들의 초기 강령에는 ‘반(反)자본주의’와 ‘반(反)사회주의’가 섞여 있다. 그들은 소자산가가 우위에 서는 경제를 바란다. 이들의 성격 때문에 파시즘 당은 자기 힘으로(‘대중 혁명’으로) 집권할 수 없다. 스스로 세상을 주조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이들을 구원해 권력으로 ‘끌어올려줘야’ 한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통제력을 잃어가는 자본가들이 이들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택할 수 있다. 저항적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쓸어버릴 앞잡이로 말이다. 파시즘 운동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하고 거리 행진과 테러를 통해 자신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결국 대자본가 쪽으로 쏠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해결책이 패배하거나 무기력에 빠졌을 때다.

그런데 《문화과학》에서 강내희, 박영균, 이광일 교수 등은 파시즘이 대중운동으로 집권했다는 것은 집권 이후 조작된 신화라고 주장한다. “위로부터 파시즘” 위험을 강조하다가 나온 이런 주장은 파시즘의 진짜 위험성을 간과하고 현 상황을 과장할 우려가 있다.

주로 퇴역 장교 등 중간계급 출신들로 구성된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의 거리 전투는 실질적이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를 분쇄하고, 사무실을 습격했으며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이들을 본파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1934년 의회를 습격해 중도우파 내각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중간계급은 작업장과 지역에서 노동계급과 밀착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탄압이라는 외부적 탄압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할 수 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진보 정당, 사회단체와 소모임 등이 모두 파괴 대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이한 국면에서 등장한 파시즘 강령들의 진짜 핵심은 늘 ‘반(反)자본주의’나 ‘반(反)대기업’이 아니라 ‘반(反)사회주의’와 ‘반(反)노동계급’ 강령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당명에 ‘사회주의’나 ‘노동’이라는 명칭을 넣을 때조차 그랬다.

파시즘의 야만성과 반동성은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를 압도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들 군사정권에서도, 탄압은 받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파업이 벌어졌다. 또한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 이 독재자들을 추앙하며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하려는 “대중적 열광”과 운동 파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대중적 열광”은커녕 떨어진 지지율과 협소한 지지 기반 사이에서 탄압과 ‘떡볶이쇼’ 사이를 오가는 피죄죄한 신세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한국에선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신식민지 파시즘” 같은 잘못된 스탈린주의적 정치 분석이 유행했다. 독재정부의 능력을 과장한 이런 분석은 노동계급과 진보 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올바른 전략·전술 수립에 걸림돌이 됐다.

반(反)파시즘 투쟁은 파시즘 운동을 거리에서 행동으로 박살내야 한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시즘이 극단적 자본주의의 구출 전략이고, 파시즘이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이라면,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반(反)파시즘 전략 역시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

노동계급과 민주주의

돌이켜 보면, 한국의 독립적 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은 반(反)독재 민주 항쟁의 일부로 시작됐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됐다. 노조 조직물의 향상과 노동운동의 성장은 노동계급의 생활과 권리 수준을 대폭 높였다.

1996년 연말 정리해고 등 노동악법과 안기부법 날치기는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으로 좌절됐다. 이 성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철폐됐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당을 만들고 결국 의회로 진출시켰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두 전선 모두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문제와 맺어 온 관계다.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시민적 권리 이상을 뜻한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동에 맞서는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구실과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좌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절망과 냉소에 빠진 중간계급이 반동적인 대안에 이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주도성과 견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파시즘이 도래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파시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거나 거꾸로 그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둘 다 무리일 것이다.

현재 경제 위기의 수준은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양극화 수준도 아직 당시 만큼 심화진 않다. 올 상반기 정치 양극화의 원폭 초점은 노무현과 그 후계자들이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기보다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한 의회를 한껏 활용하길 바라며 의회에서 온갖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국가와 독립적인 반동적 대중운동이 등장하고 있지도 않다. 그보다는 여전히 국가 기구 자체가 반동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한국전쟁 참전 세대인 애국행동대가 이들과 같은 구실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해 보인다. 국우익들은 중간계급 대중 속에서 젊은 활동가들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주로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파시즘의 맹아들은 아직 충분히 발아되지 않았다. 물론, 경제 위기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파시즘이 발아할 조건들은 지금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의 반동 공세에 맞선 투쟁을 계속 발전시키며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앞장선 언론노조나 시국선언 릴레이에 나선 전교조처럼 노동자 투쟁과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파시즘은 하수구에 서식하는 쥐들과 같다. 그것은 반혁명적 절망의 몸부림이다. 따라서 쥐 사냥만으론 부족하다. 쥐의 서식처가 되는 하수구를 대청소해야 한다.

칼럼/논설

우석균 칼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없다.” 지난 7월 20일 쌍용자동차 사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파업노동자들에게는 물도 가스도 의약품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사측은 스스로 그토록 화재 위험이 크하던 파업 현장의 소화 전까지 차단했다. 의료진도 이날 오후부터는 들어가지 못했고 음식물 반입은 이미 16일부터 금지됐다.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72시간 정도다. 범법자에게는 인도주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즉 파업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가? 누구도 인간에게 물과 음식과 진료 받을 권리와 의약품을 빼앗을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쌍용자동차 자본 측의 행위야말로 반인륜적 범죄행위이고 간접적인 살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이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조에 “어떤 경우도 인간에게서 생존수단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국도 이 규약 가입국이므로 한국 정부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는 쌍용자동차 자본 같은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범법자는 파업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쌍용자동차 자본이고 이명박 정부이며 이 정권의 경찰이다.

파업노동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애초에 쌍용자동차 경영자들과 이명박 정권에게 인도주의란 것 자체가 없었을 뿐이다.

필자도 쌍용자동차에 진료를 몇 번 갔다. 언론에는 마치 7월 20일부터 진료가 차단된 것으로 보도된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이 지금까지 15회 정도 진료를 갔는데, 사실상 방해 받지

않고 제대로 진료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경찰이건 쌍용자동차 사측이건 무슨 핑계를 대서든 항상 방해로 했다. 특히 최근 3주간은 경찰과 사측의 극심한 방해로 몇시간씩 싸움을 한 끝에 제한된 의료진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것은 심지어 전ظار터에서도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과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적군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다.

당장 의료진도 환자들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겠는가? 가족들은 공장벽을 사이에 두고 얼굴만 마주 봐야 했다. 지지난주 일요일 우리가 진료를 하느라 경찰 방어벽이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서 공장벽을 사이에 두고 몇몇 가족이 만났다(물론 이것도 팽택경찰서장이 진료도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어쩌다가 문 앞에서 진료를 하게 된 것이었다).

독성화학무기

아직도 그날 본 한 가족이 기억 난다. 아내는 몸 성히 잘 있으라고 말만 하고 큰 아이는 의젓해 보이려고 울음을 참고, 아직 어린 둘째는 공장벽을 넘어 아빠에게 안기려던 가족의 모습. 그렇게 아빠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가족대책위가 공장 바깥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데 뻘뻘 세 살 네 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공비행으로 굉음과 먼지 광풍을 날리고야 마는 경찰의 헬리콥터, 그리고 그들이 뿌리는 전단 꾸러미. 한마디로 어린아이도, 여성도, 의료진도, 부상자도 다 필요없는 전쟁터였을 뿐이다.

경찰이 막아서던 때는 그나마 나았다. 쌍용자동차 측이 공장을 통제하기 시작한 13일부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아예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나마 말이라도 해 볼 수 있었지만 쌍용자동차가 동원한 직원인지 용

역강제인지 정체 모를 사람들은 아예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 기막힌 것은 의료진은 들여보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항의에 경찰이 하는 말이 사측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다. 경찰이 자본의 편이라는 것을 떠나 그들의 도구라는 말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쌍용자동차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다.

경찰은 진료 봉쇄에 항의하러 간 의사마저 잡아넣었으니 도대체 이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까? 경찰에? 검찰에?

20일 테이저건이 뺨에 박힌 노동자가 있어 무려 7시간 만에 의사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서 보고 온 공장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항생제도 진료물품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해서 테이저건이 박힌 뺨을 오래된 칼을 갈아 수술해야 했고, 항생제도 없이 수술을 해야 했다.

의약품 반입 봉쇄로 녹내장이 악화해 자칫 실명할 수도 있는 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이 떨어진 환자, 골절이나 창상이 악화된 환자, 이제 환자는 2백 명이 넘어 가는데 공장 안은 온통 최루액 천지라 의무실에서 단 10분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 쌍용차 파업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들은 해고당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공장 안에 눈도 못 볼 정도로 자욱히 깔려 있다는 최루액을 보자. 최루액의 무해성에 대한 경찰의 시연에서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임으로써 경찰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은 CS와 MC다.

경찰은 1백 분의 1로 희석한다지만 이것이 실제로 쓰일 때는 얼마나 희석되는지도 알 수 없다. 더욱이 MC는 IARC 기준 2B, 즉 동물실험으로 발

암성이 밝혀진 물질이다. 이를 위험성이 없다거나 무해하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정부가 모든 물질에 대해 밝히게 돼 있는 NSDFS 자료에 나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CS다. 1987년 한국에서 사용된 최루가스의 유해성이 문제가 돼 논문으로 나온 자료가 최루가스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이다. 이제 와서 다시 CS 가스의 위험성을 알아보려고 이 논문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시사적이다. 이 논문의 제목이 뭘지 아는가? 〈최루가스는 단지 불편하게 하는 제재인가 아니면 독성화학무기인가〉이다.

CS 등의 성분을 조사한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휴 교수는 꽤, 간, 생식계통 독성 등이 너무 심각해 이는 화학무기이므로, 의료인들이 단지 이를 연구할 뿐 아니라 금지하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무기를 섞은 물질이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노동자를 인간으로 본다면 이렇게는 못한다.

지금도 쌍용자동차에 가 있는 후배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안에 다친 사람만 50여 명이 넘는 데 의사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며칠만 진료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에게 생각나는 것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영화가 되뇌던 말,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모두 죽여버려” 하던 그 구절만 계속 생각이 난다.

아빠가 물도 없고 의료진도 밥도 없는 공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는 어린이들에게 도대체 남는 생각이 무엇일까? 나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법을 지키고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도대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논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이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기본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수고했다. 시원하다. 계속 좀 밝아 달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옳다고 보라.”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직후 한 말이다. 진짜 멍청한 자다.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6.8퍼센트가 방송법을 반대했다. 게다가 의회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해 국민의 80퍼센트가 미디어법 처리 갈등 원인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 제 무덤을 팠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처럼 즉각적인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주로 국가 탄압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억압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를 더한층 강화할 것이다.

“지배계급이 합의를 상실하는 것, 다시 말해 더는 ‘지도적’이지 못하고 단지 ‘지배적’이고 강제적인 힘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대중이 자신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멀어져 이전에 믿었던 것을 이제는 더는 믿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를 두고 “권위의 위기”, “헤게모니의 위기”라고 불렀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선거로 집권 했는데 자신감은 없고, 대화는 전혀 안 하고, 하는 법도 모르는 정권”(한홍구 교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설익은 ‘친서민’ 정책을 부라부라 내놓은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타협책’은 대중과 또 다른 갈등과 균열을 빚을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 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구조조정(대량 해고)과 비정규직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한사코 고집하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말하니 그 정부가 ‘공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중의 균열을 강제력을 통해 막을 수는 없다. 급진 이데올로기가 부상하고 급진적인 지식인들의 주장과 강연이 대중적 흡입력을 갖는 까닭이다.

위기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거품 경제의 시작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어설픈 ‘쇼’를 통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복합적이며 주요 사회 모순들과 결합돼 있다.

이명박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기회복이 빠르다”고 했다. 참 어리석은 주장이다. 수출 지향적이고 따라서 그만큼 경제의 외생적 효과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하니 말이다.

지난 6월 초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인 배리 아이

켄그린과 케빈 오루르케는 현재 위기와 1930년대 대불황을 비교하는 구체적 통계를 발표했다. “세계 산업 생산은 1930년대 하락과 엇비슷하고, ‘새싹’의 조짐은 확실히 없다.” “세계 주식 시장은 3월부터 약간 반등했고 세계 무역은 안정화됐지만, 대불황 때보다 더 낮은 수치다.”

물론 금융 시장들이 지난해 가을 붕괴 당시의 끔찍한 공포를 부분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일부 경제들의 하강 속도가 완화되고 중국의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 시장의 투기(특히 유가 인상)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거품 경제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은 “장기적인 스태그네이션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경제 위기가 필연적으로 좌파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대불황의 주요 정치적 수혜자는 아돌프 히틀러였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 경제 위기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언제나 좌파에 이롭다는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도 잘못됐다.

1930년대의 경험은 대규모 경제 침체가 사회를 정치적으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불황 때 히틀러와 프랑코(스페인)의 승리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대응해, 거대한 노동계급의 붕괴, 즉 1934년과 1936년 프랑스 노동자 투쟁, 1930년대 중엽 미국의 전국적 점거 파업 물결, 1936~1937년 스페인 혁명도 있었다.

요컨대, 결국 우파가 승리했지만 필연적 결론은 아니었다.

지금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양극화와 이윤 회복을 위한 사장들의 노력이 중요한 투쟁들을 부를 수 있다.

이런 투쟁들의 결론은 절대 결정돼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유기적 위기”의 경우에, 경쟁하는 사회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응집력과 지도력의 질이 결정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위기의 효과에 맞선 저항을 지지·강화하며 저항을 건설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이 되도록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8월 15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저항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운동에 노동계급이 조직적·집단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얼마나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느냐에 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서 실종된 고리는 조직 노동계급이었다. 서울에서만 70만여 명이 결집하고서도 이명박 정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조직 노동계급의 참가 부족과 노동계급적 투쟁 방식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런 운동 건설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진보 진영의 단결 프로젝트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열의 경험과 정치적 불일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선, 산업 전선, 선거 전선 등에서 진보 진영의 단결을 더한층 강화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범죄 행각을 저지해야 민주당이 아닌 정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한국인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폭언 사건

지배자들의 차별 정책과 마녀사냥이 만든 인종 차별

최근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가 한국인에게 당한 폭언 문제로 한국의 인종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10일 밤에 버스를 타고 가던 후세인은 한국인 남성 박 아무개한테 “너 냄새나, 이 더러운 새끼야” “Fuck you” 따위의 심한 욕설을 들었다. 박 아무개는 후세인 씨와 같이 있던 동료 여성에게도 “넌 뭐야? 조선녀 맞아?” “조선녀가 새끼만 자식이란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따위의 폭언을 퍼붓고 발로 밟기도 했다.

후세인과 동료 여성이 참다못해 박 아무개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었다. 박 아무개는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지만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도리어 ‘화해’를 요구했다.

보노짓이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경찰은 “한국에는 그런 인종 차별은 없다”며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다.

심지어 경찰은 후세인의 신분을 의심하며 외국인등록증을 확인 조사하고 후세인에게 반말을 쓰기도 했다. 후세인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한국에 머물러 왔다. 어처구니없게도 후세인은 모욕죄로 박 아무개한테 고소당했다.

사건 뒤 성공회대학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인종 차별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사법처리와 경찰관들의 대응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 해당 경찰관 징계, 경찰 책임자 사과, 외국인과 이주자 고용·초청·상대하는 모든 기관에 성·인종 차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감춰진 인종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 차별과 관련성을 부각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인종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한국에도 인종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반두비〉출연자 마블 알업 씨와 제작자는 영화 개봉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거리, 학교, 직장 등 곳곳에서 피부색과 국적 등에 따른 차별과 천대가 벌어진다. 특히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 출신들이 지독한 편견과 차별, 천대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영어학원이나 방송에서 흑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개도국 출신들은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는
정부의 정책과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이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인종 차별은 단지 개인의 편견 문제가 아니다. 차별을 부추기는 정부와 보수 언론에 맞선 항의 운동이 필요하다.

사진 이윤선

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검둥이’ ‘원숭이’라고 놀림을 당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부모들의 얘기도 많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편견이나 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외국인들은 체류·거주·고용·임금 등에서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규제를 받고 이것은 차별로 이어진다. 특히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일수록 차별이 극심하다. 작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자에 대한 아만적 단속은 그 예다.

제도적 차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차별은 흔히 개도국 출신 사람들에게 대한 인종적 편견을 심어 준다.

인종적 편견은 법무부의 미등록자 단속 때에도 나타난다. 신원과 소재지가 분명하다고 해도 개도국 출신 미등록노동자들은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미국과 일본 출신은 ‘출국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중국, 아시아(일본 제외), 아프리카 출신 미등록자들의 강제 추방 비중(30~40퍼센트)이 미국과 일본 출신 미등록자의 경우(1~2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인종 차별에서 특히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출신이 표적이 되는 것은

1990년대 이래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해 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 단속반들은 마취 총을 쓰고 그물을 던지고 공장과 기숙사를 불시에 덮치는 등 온갖 야만적인 방식을 사용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심각한 부상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또, 가족들을 생이별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아만적인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온갖 혐오를 부추겼다. “외국인 에이즈 확산 비상”, “기승을 부리는 외국인 범죄” 등 공포를 부추겼다. 지난해 조 펠리핀 이주노동자가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MBC, 〈세계일보〉, 〈연한뉴스〉, 〈월간 조선〉 등 주류 언론까지 나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다. 외국인의 범죄가 확률·통계상 한국인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는 데도 말이다.

공중과 방송과 주류 언론들까지 마녀사냥에 가세하면서 지난 몇 년 새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같은 극우들이 설치가 시작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쓰레기 같은 글들을 올리는 것을 넘어 거리에 서 단속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1년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 뒤부터는 외국인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보도도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테러리스트”라 불렀고, 보수 언론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이번에 후세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한국인은 “Arab”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데, 아마 후세인을 아랍인으로 여긴 듯하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를 맞아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실업과 빈곤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더욱 기승을 떨치고 있다. 이명박은 올해 신규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수준의 3분의 1로 대폭 축소하고 내국인 일자리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내놓고 외국인 지문·안면 정보 제공 의무화, 불심검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요컨대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는 정부의 정책과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이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심각한 실업과 빈곤 때문에 대중의 삶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인종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적 극우들이 부상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관념에 반대해야 한다. 특히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주노동자 규제와 미등록자 단속·추방, 출입국관리법 개악 등)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맞서는 항의와 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져야 한다.

정진희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창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매주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 금 저녁 7시~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지면 제약으로 이번호 독자편지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